

제371회 국회  
(정기회)국회 본회의 회의록  
(임시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2019년9월27일(금) 오후 2시

## 의사일정

1.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 상정된 안건

1.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 1

(14시04분 개의)

○의장 문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정회는 있어서는 안 되는 매우 엄중한 사례를 남겼다고 의장은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회도 중요한 의사일정의 하나입니다. 회의장 소란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회도 합의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정부질문 기간 중 합의 없이 정회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의장은 어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이 끝까지 본회의 사회를 볼 생각입니다.

## 1.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14시06분)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4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외교부장관의 대리출석을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평택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평택갑 출신 원유철 의원입니다.

북핵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의 공동 번영이라는 우리 민족의 명운이 걸린 최대의 안보 현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과 아마추어 포퓰리즘으로 북한의 비핵화는 커녕 핵 보유만 기정사실화 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커져 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2017년에 수소폭탄 핵실험과 미국 본토를 핵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1만 3000km로 추정되는 화성 15호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하였습니다.

1991년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은 여섯 차례의 핵 실험과 수십 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마침내 핵무력 국가 완성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완화·보상이라는 반복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난 30년 동안 말폭탄만 늘어놓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남북한은 핵폭탄 대 말폭탄의 대결이었습니다.

2017년 핵무력을 완성한 김정은은 2018년부터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북 정상회담의 협상에 나섰습니다.

이로부터 2년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북핵 폐기는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시간만 끌며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만 더욱 진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안보 현실은 ‘맞을 짓을 하지 마라’, ‘세계 웃기는 사람’이라는 굴욕적인 말을 들어 가며 9·19 군사합의, 한미연합훈련의 폐지와 축소 그리고 포퓰리즘 국방 정책으로 무장해제가 되어 가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회담인 미·북 회담이 결렬되었을 경우에 우리 국민은 북한의 핵을 안고 살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 현안 중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분야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안보에서는 역시 북한의 비핵화가 중대하고요. 국내적으로는 당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이 저로서는 심각합니다.

○원유철 의원 그런데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국정 현안은 조국입니다. 조국 블랙홀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 현안을 빨려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게까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원유철 의원 지금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온통 조국 장관에 대한 부적절성 또 조국 장관이 있는 한 대한민국 국정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정부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보에서의 비핵화 완성 그리고 국민의, 민생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다른 민생 문제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유철 의원 총리께서는 국정을 통괄해야 되실 위치에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원유철 의원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조국 한 사

람 때문에 대한민국 국정이 표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심이 갈라지고 민심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이러한 사태를 빨리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당연히 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원유철 의원 빨리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책임이 있으십니까, 총리께서는.

○국무총리 이낙연 늘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지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북 회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회담이 성공으로 가느냐, 실패로 가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질 것으로 보는데 총리께서는 이 회담이 실패할 경우가 어떤 경우로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회담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단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진 않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데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원유철 의원 제가 드린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북핵 폐기를 위한 미·북 회담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를 상정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총리가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원유철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북 회담이 결렬이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북핵이 폐기가 아닌 동결로 가는 경우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경우가 북핵 폐기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 회담이 실패로 돌아오는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지금 북한과 미국은 하노이에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실무회담의 준비단계에서부터 매우 심각한 또는 진중한 탐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아니,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총리께서 답변하시기를 ‘북핵은 동결이 아니라 폐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최종적인 목표는 폐기지요.

○원유철 의원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물론입니다.

○원유철 의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회담은 실패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단번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유철 의원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북한의 핵 위협에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핵 폐기가 되지 않을 경우나 북핵이 폐기가 아닌 동결로 갈 경우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사시 북한의 핵 인질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문재인 정부의 플랜 B는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데는 옳지가 않고요. 또 폐기냐, 동결이냐 둘 중에 하나뿐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원유철 의원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제가……

○원유철 의원 그러면 북한 핵을 우리 국민들이 계속 안고, 이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상당한 정도까지 진전되면 또 그다음 단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북한과 미국 사이에 단계적·동시적 진행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있는 게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원유철 의원 말씀하십시오, 계속.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원유철 의원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 플랜 B가 없다고 총리께서 답변 과정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도대체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대책도 없어 보입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시다시피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북한 측과 대화하고 있고 또 미국 또한 그 대화에 함께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비핵화 협상을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남북한과 미국 모두 완벽한 비핵화에 두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원유철 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북핵 폐기를 위한 미·북 간의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회담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 문재인 정부의 플랜 B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성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실패할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데는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유철 의원 대책을 국민들에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하는 역할이 도대체 뭐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그것부터 말씀드리는데는 현명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원유철 의원 그러면 국민들은 계속 북핵 위협의 불안감에 떨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지금 당장 북한과 미국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실무 접촉이 성공하도록 기원하고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원유철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데는, 물론 북핵 폐기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 회담이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원유철 의원 본 의원도 바라고 온 국민도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런……

○원유철 의원 그런데 만약에 실패를 할 경우에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들의安危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책을 밝히려는 말씀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자, 의원님, 의원님께서 이번 북·미 회담이 성공하길 바라신다 그랬으니까요 성공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의원 저는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대책도 없는 정부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요.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을 요구를 했어요. 그렇지요, 총리님?

○국무총리 이낙연 예, 한 번 협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항목의 추가는 SMA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적해 드렸습니다.

○원유철 의원 저는, 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해서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 핵 폐기를 하는 지금 이러한 우리의 노력 또 미·북 간의 회담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에 한미연합사가 핵을 공유하는 한국형 핵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 그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하고 의제에 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정부는 일관되게 말씀드리는데 바와 같이 어떠한 종류의 핵의 반입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유철 의원 지금 총리께서 하시는 답변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 아무 대책이 없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이 들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자꾸 그렇게 단정하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유철 의원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미 회담이 성공하길 바라고 그렇게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지금 말입니다, 비건 북·미 특별대표도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고 미국 의회조사국 이번 달 6일 보고서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국방부 소속의 영관급 장교들이 학술 논문지에다가 ‘이제 한미일이 핵을 공유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북한의 핵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럴 경우에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한 끝에 나오는 제안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비건 특별대표의 그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었다고 설명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그러면 미 국방부 산하의 영관급 장교들의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전·현직 군인들 일부 가운데

데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하물며 미국에서도 이러한 걱정을 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이 정부는. 오로지 북한 바라기만 하고 북한 김정은의 선의에만 의존하고 있는 정부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미국에서도 그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원유철 의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유엔에서 행한 연설 내용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열추 신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원유철 의원 무슨 내용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님께서 하문하고 싶으신 것을 물어 주시지요.

○원유철 의원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이제 글로벌리즘은 종교에 가깝다. 내셔널리즘으로 가야 된다’, 국가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함의가 담겨 있다고 저는 보는데 한미 동맹을 포함해서 주한미군 문제, 심지어는 안보까지 우리가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자국 중심주의의 대두가 하나의 현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대한민국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지금 더 많은 방위비 증액을 통해서 국방력 증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저는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가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 정부는 한심하기가 그지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불턴이 7월 달에 와서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50억 달러 요구하고 갔지 않았습니까?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이제야 정상회담에 가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무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샀는지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입니까? 그 전에 정부가 나서서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나와서 그런 노력들을 미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가서 정상회담에서는 저는 총리 대신에 대통령께서 간다고 그래서

무슨 획기적인 일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가서 한다는 얘기가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우리가 무기 이렇게 많이 사고 있으니까 좀 적당히 해라 이라고 온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는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저는 지금 동맹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으로 가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걱정 어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보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억지력을 갖추고 한국형 새로운 핵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십시오.

미국의 핵우산 잘 펼쳐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지금 우리 한미 동맹 간에는 맞춤형 확장억제정책, 억제전략을 현재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미국의 핵우산이 접혀질 경우 장관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한미 동맹 관계를 굳건하게 유지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국방장관으로서 미국의 기존의 매티스 장관 또 새너쥔 장관, 지금 현재 에스퍼 장관 그다음에 또 던포드 의장이라든지 이번에 새로 바뀌는 밀리 의장, 태평양사령관 또 우리 연합사령관, 국방장관으로서 하여튼 유대관계를 긴밀하게 해야 되고 또 그런 우리 국방·군사 정책을 해야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수많은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서, 무력도발들에 대해서 그저 작은 실험뿐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

○원유철 의원 뭘 부적절합니까,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할 얘기는 해야지!

○국방부장관 정경두 저는 대한민국의 국방부장

관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잘 지킬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장관님, 북핵 폐기가 안 될 경우 국방부장관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조금 전에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부적절하지만 저는 핵 폐기,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 정책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현재도 그다음에 미래의 우리 국방력 건설하는 데 조금도 후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저는 북핵 폐기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 한미연합사가 유럽의 NATO 형식으로 핵을 공유하는 그런 한국형 핵무장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검토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지금 현재 우리의 정책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이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방침이고 이것은 이전 정부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그런 맞춤형 확장억제전략이 지속적으로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유철 의원 좀 더 국민들이 안심하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10월 달에 SCM 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11월 달에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11월 계획…… 그때 SCM 할 때, 한미안보연례협의 할 때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을 심각하게 미국 측과 협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우리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유철 의원 들어가세요.

지난 2년간 북핵 폐기를 위한 남·북·미 정상간 회담은 가시적 성과 없이 오로지 장밋빛 환상만을 심어 주었습니다. 기대감만 부풀리고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북핵 폐기 성적표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F 학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내년에 대선과 총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이 선거라

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북핵 폐기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핵 이벤트 쇼로 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천만 국민의 안위가 달린 북핵을 정치적 이벤트 쇼로 허송세월하며 보내게 할 수 없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올해 말까지 비핵화 회담에 대한 성과가 없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성과가 없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가야 할 곳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야 할 것입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핵을 가진 국가가 이웃에 있을 경우 같이 핵을 갖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상호 불가침조약을 맺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상호 핵보유국이 된 이후에 해묵은 분쟁 대신 역설적으로 평화를 유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핵은 핵으로만 억지할 수가 있습니다.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져야지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북 간 회담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핵 폐기 시간표에는 이제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북핵을 포기하든지 우리가 핵을 갖든지 사생결단을 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화는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역사가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100년 전 구한말 시대에 주변 열강들이 힘이 없던 대한제국의 주권을 마음껏 유린했던 불행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천 년 역사 동안 우리 선조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라에 힘이 없을 때 얼마나 많은 수모와 고난을 당했는지 역사가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강한 국방력과 강한 대한민국만이 우리의 평화를 지켜 낼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원유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 만안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걸 의원 소개받은 대로 경기 안양 만안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입니다.

오늘 대정부질문 하기에 앞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야당, 검찰, 언론의 파상공격이 권력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은 조국 가족과 관련자 몇 분에 대해서 특수부 40명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 200명을 상시고용해서 갖은 인권 유린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청문회 그날 대대적 압수수색을 시행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바로 직전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그날 소환 없이 기소했습니다. 역사적인 한미정상회담 그날 장관에 대한 초유의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그때 압수수색 당시에 업무 중이었습니다. 장관이기 전에 자연인이었습니다. 현장의 검사팀장과 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가급적 신속한 압수 집행을 해 달라는 부탁을 전화로 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의 소유자였던 장관입니다. 그리고 검찰수사로 건강을 심하게 해친 정경심 교수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 압수수색 현장에 참관하면서 혹시라도 있을 부적절한 압수수색 집행에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자연인입니다.

만약 조국 장관이 귀하해서 현장에 참관했다면 검찰은 수사를 방해하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반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장 집행시에 처와 자식에 대한 부탁을 자연인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명했습니다. 이를 야당은 장관의 부당한 수사 지휘, 위법행위로 탄핵을 소추하겠다고까지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총리께서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그 전화통화가 가장으로서, 집의 주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상식적인 당부로 보십니까, 아니면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법무부장관으로서 지휘감독했다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해석은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123조는 가택을 압수수색할 경우에는 주거주, 그 집에 사는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을 둔 취지는 공권력의 집행, 법 집행으로서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 기본권의 침해는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이 계속됐다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권력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그 원칙을 검찰이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의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검찰 측에서 바로 그 얘기를 내놓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라면 피의사실 유포 같은 것도 그때그때 반성하는 자세를 취했다라면 훨씬 더 균형 있는 검찰이라는 인상을 주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이종걸 의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두 마디 보충해 볼까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통상적인 자연인으로서, 영장 집행 장소에서의 개인의 방어권 행사를 한 자연인으로서의 그런 통상적인 당부나 아니면 정말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압력행사나라고 하는 점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라면 저는 전화를 받은 검사의 태도 그리고 그 이후 압수수색의 절차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조국 장관의 전화통화 요구에 영장주임검사는 아무 이상 없이 전화를 받았고 또 부적절한 통화라고 하는,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11시간에 걸친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최소한 신속하게 해 달라고 하는 법무부장관의 자연인으로서의 부탁도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이지요.

압력을 느꼈다고 생각할 전혀 그 상황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 검찰이 정치행위를 한 언론 플레이, 피의사실 공표 이것과 더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걸 의원 그런데 또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이런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야당 의원에게 누설하는 검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불법이

더 큼니까 아니면 정말 법무부장관으로서 앞뒤 전후 100% 조심하지 못한 전화통화의 그 부당성이 더 커 보입니까? 총리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검찰이 장관의 그러한 부탁을 문제 삼는다면 검찰 스스로의 자세도 되돌아보는 균형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걸 의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차관님 오셨네요.

차관님은 수행은 안 하셨겠군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이종걸 의원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일부 언론에서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만 답변하고 문 대통령은 무시당했다 이렇게 폄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그런 예의 없는 스타일 그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거의 모든 나라 정상회담에서도 나타난 일이었어 요. 한국 관계에서의 특별한 그런 무시행위였습니까? 어떻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외국 정상의 스타일에 대해서 직접 언급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의전적으로 소홀한 대접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걸 의원 그 두 대통령께서 정해진 시간을 넘겨서 한 65분간 회담을 하였고, 장소도 우리 측 숙소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뒷시간을 잡아 좀 더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가장 마지막 시간을 회담 일정으로 잡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게 홀대가 아니라 상당한 배려를 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미 외교 당국 간에 굉장히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순서라든지 또는 예정시간을 넘겨서 회담을 진행했다든지 그런 데 다 그런 노력들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걸 의원 당시에 회담 중에 최근 북한의 대화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정신을 분명히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재확인했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이종걸 의원 그 주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 이고요. 그 점이 한미 정상회담의 아주 중점적인 성과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미 동맹의 지속 강화를 재천명했습니다. 과거 한미 동맹은 그 보조축으로 일본이 있었지요. 그래서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가 기본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이 한일 관계 갈등에 있어 하나의 주요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구체적인 이 갈등에 대한 중재 노력에 대한 용의가 있었다는 의사를 전달받으셨나요, 혹시?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미국은 중재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갈등이 존재하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서로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한일 양국 간의 어려움을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사는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고,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그때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구체적인 말씀이 있었나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런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미국의 기존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종걸 의원 뭔가 거기에 좀 중요한 의제가, 한미 동맹에 있어서 한미일 협력관계가 참 중요한데요. 뭔가 좀 전략적 무관심이랄까 그런 듯한 느낌 이런 것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한미일 동맹관계에서 일본의 시급성이 아직은 없다, 그러니까 당분간 군사적 위협이 사라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갈등관계가 아주 지속적이고 깊고 심각하기 때문에 중재 역할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둔 것으로 느꼈는가, 혹시 둘 중의 하나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한일 간의 갈등에 관심이 저하됐든지 또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중재 의사 없다는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한일 간에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고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 하는 입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있었습니다. 조유의 일이지요. 한 세 번째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탄핵소추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 정치적 일정을 잡는 데 여러 가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앞으로 아주 중요한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안보·외교 현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는 그런 전망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트럼프가 오히려 정면 돌파하면서 탄핵의 이유들을 뒤엎는 방법으로, 재선 승리에 필요한 외교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핵심 안보 사안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이라는 정반대의 예측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미국의 국내 정세 문제에 관해서는 직접 언급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북·미 실무협상이 잘 진전되고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변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로서는 기대도 하고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걸 의원 총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1965년 당시의 한일 청구권 협정, 그에 관해서 총리님의 식견 높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때 당시에 사토 에이사쿠가 총리였지요? 지금은 아베 총리의 외증조부인 사토 에이사쿠가 그 당시에, 청구권 협정 당시에 총리였습니다. 최장수 총리였었지요. 그자가 분명히 한 것은 독도는 일본의 땅이고 절대로 일본의 조선 점령은 강제점령도 아니고 불법점령도 아니고, 합법적인 틀에서 이번 보상은 경제적 보상으로 은사금, 축하금 정도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고, 사실 대한민국이 그 일본의 주장을 꺾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965년이면 일본 국력의 약 26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어려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또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빼고라도요. 그 점에 관한 총리의 생각, 그것이 사실 그 이후에 대일청구권 문제, 한일 문제, 모든 것이 꼬이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1965년 당시에 미국의 동아



시아 전략 그리고 박정희 정부의 생각 등이 맞물려서, 물론 일본 정부의 생각도 그랬겠지만, 국교 정상화 협상과 한일기본협정을 서둘러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두르다 보니 식민지배의 법적 유효성 여부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물어 둔 채, 각자 따로따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 채 협정을 체결한 것이 두고두고 문제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 인정합니다.

○**이종걸 의원** 한 차례 또 다른 파도가 남아 있습니다. 일본이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인가요, 북한과 조일협정을 혹시 할 것이 아니냐라는 점에 관해서 첫 번째로는 고이즈미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조일평양선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전향적인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아베가 이와 같은 북한과의 조일평양선언 유사한 그런 배상금 협정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이 하고 싶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위협입니다. 핵 위협입니다.

지금 북·미 간의 협상이 사실 핵의 문제에 관해 정면으로 돌파되고 있는데요. 그 점에 관해서 아베가 과연 핵 문제와 미국 문제가 패키지로 사라졌을 때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을 하나의 가상적국 대상으로 하는 조일관계에서 다시 한번 이런 것을 시도할 공산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총리님 생각이?

○**국무총리 이낙연** 아베 신조 총리께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평양에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평양선언을 맺었을 때 그 수행인원 중의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베 총리의 뇌리에는 그때의 일이 깔려 있을 것이고 만약 북·일 간의 관계를 진전시킨다면 평양선언이 그 토대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짐작합니다.

○**이종걸 의원** 청구권협정 이후에 대한민국과 일본 간에 기본조약이 맺어지지요. 그때 뒤에는 식민지 지배, 어떻든 간에 그 지배는 무효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진행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 자체도 서로 오해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의 다양성을 낳게 되었는데요.

저는 새로운 조일조약이 맺어질 때 그때는 분명히 북한이 일본의 강점은 불법 강점이고 약 300억 정도의 배상금이 된다면 그것을 손해배상

금으로 받을 공산이 큼니다.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면 일본과 협상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남북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여러 관점, 준비, 해야 될 여러 가지 국가적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대단히 가상을 전제로 하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북·일 간의 접촉이나 또는 국교 정상화 시도를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부가 할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걸 의원** 지금 한일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일본 물건에 대해서 불매운동도 이루어지고 있고 대통령께서 선포하신 한일, 경제 협박에 의한 대한민국의 항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깊은 얘기들은 아마 다른 위원회에서 할 것 같고요.

일본의 전범기업들 또는 그 계열사들이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여러 수주행위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현충시설에 에스원이라고 하는 시큐리티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세콤이 대주주입니다. 제1대 주주인데 그 세콤이 우리나라 현충시설 전부 다 수주받아서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점 혹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최근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이종걸 의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디다. 그러나 국민의 정서로 볼 적에는 충분히 여러 저항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국제조약이나 또는 관계 국내 법령을 준수했느냐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종걸 의원** 준비한 것은 많은데 더 이상 물을 시간이 안 되는군요.

식견 높은 총리님, 일본과의 관계에 관한 정책에 있어 중심을 좀 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잡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이종걸 의원** 경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이종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김중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님 또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바른미래당 국방위 소속 세종특별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중로 의원입니다.

바로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10월 26일이 무슨 날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얼핏 생각되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이 먼저 떠오르고요 안중근 의사 의거일이 같은 날입니다.

○**김중로 의원** 그것보다 저는 총리님이 10월 26일까지 하시면 우리나라 최장수 총리를 역임하신다고 그래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직선제 이후일 겁니다. 그 이전에는……

○**김중로 의원** 예, 직선제 87년 이후에.

제가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모든 직책에서 1년만 지나면 제목만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2년 반 넘었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중로 의원** 그러면 지금 국정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아실 건데, 저는 조국 임명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국민들이 싫어해요, 지금. 질문조차도 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저는 느낍니다. 총리님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잘 하시는 총리님도 아마 고달프실 겁니다. 생각하는 것하고 행동하고 언어하고 다를 때 그것같이 사람이 불편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청문회와 어제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정말 제가 존경이라는 단어를 국회에서 많이 쓰는데 존경이라는 단어를 꼭 썼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나라에서 쓰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청문회를 통해서 박용진 의원님 또 금태섭 의원님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으로 불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님 있지요. 본인이 그렇게 했어요, 조직이나 정권에 충성을 얹고 국민과 국가에 충성하겠다는. 저는 그 얘기를 2년 전부터 국방부장관한테 했습니다. 임명권자한테 충성하지 말고 국민과 국가를 보라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서 아직 수사가 다 완결은 안 됐습시다마는 끝나고 나면 정말 정의와 평등과 공정을 그분께서 실현한다면, 그것을 실천한다면 저는 정말 평생 존경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국 그 문제는, 저는 아까 총리께서 최장수 총리를 하시게 되는 영광이 주어질 건데, 그러면 지금쯤이면 정말 노련미와 업무파악 모든 것에 정통해 계실 텐데 이런 때 마지막으로, 총리께서 아무리 다른 걸 잘하시고 지금 대권주자 1위를 달리고 계시지만 이번 이 기회를 정말 대통령께 다시 건의를 드려야 되는데 어제 답변하실 때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검토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지금 국민들한테는 1초가 아까운데, 모든 블랙홀로 돼서 여기로 빨아들이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빨리 마음을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민생을 챙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의향이 없으신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어제든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 많은 것이 혼란스럽게 섞여 있습니다만 가닥이 잡히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책임 있게 임하겠습니다.

○**김중로 의원** 하여튼 시기를 다 상실했지만 지금이라도 하세요. 1초가 급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갖는다는 건 지도자의 제일 큰 덕목이라고 저는 봐요. 공약이나 자기가 잘못된 정책을 했더라도 국민이나 국가에 큰 리스크가 따른다고 생각을 하고 확신을 한다면 그걸 받아들이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다만 국민을 설득하는 책임은 대통령께 있는 겁니다. 그걸 잘 깊이 새기시고 정말 실천에 옮기신다면 역사에 남는 총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데, 제가 오늘 비핵화 문제하고 한미 동맹 문제, 통일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건데 대통령 취임사는 한번 우리가 다 여기 있는 분들이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다섯 번을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나와서 총리님한테 ‘취임사 읽어 봤느냐’ 할 때 ‘다 안 읽어 봤다’ 그래서 ‘읽어 보시라’, 그러고 나서 진짜 읽어 보시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모든 분들한테 저는 전파를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하셨더라고요. 정부부처 몇 군데 국장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총리께서 지시하셨나. 읽어 봤느냐’

냐', 안 읽어 봤어요.

여기에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신념이 저는 녹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에 저 다섯 가지 요약이 돼요. 저기 보이시지요? 이 정도는 알고 했더라면 조국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견 여야를 불문하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실천을 해 간다면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저도 이것 정말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늘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중로 의원 지난번에도 초심 얘기를 하셨는데 또 그 말씀만 하시는데 정말 이것은 총리님만 아셔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알고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신념을 알아야 하지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생겼겠어요?

그리고 비핵화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가지요. 비핵화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지금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총리님,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언뜻 물어봤는데 조선반도 비핵화냐, 한반도 비핵화냐, 북한의 비핵화냐 어떤 게 맞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리가 흔히 북한의 비핵화라 합니다만 공식 문서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이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김중로 의원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안보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비핵화나 조선 비핵화는 중국과 북한이 끈질기게 지금까지 이어오는 적화통일의 대남 전략의 하나예요. 그 속에 미군 철수와 미핵 전략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르는 사이에 한반도 전략, 조선반도 전략 하다가는 나중에 책잡힙니다. 이것 분명하게 북한의……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러니까요.

○김중로 의원 그렇지요? 그 문제도 그렇고, 현실점에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중로 의원 총리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북한에 핵

과학자가 2000명이 있어요. 또 거기에 딸린 기술자가 1만 명이 있습니다. 6차 핵실험이 끝나면 이미 핵실험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세계적으로 보면.

6차 핵실험이 끝난 그 수치로 서울대학교 서균렬 박사가 예상한 것은 1만 2000명이 살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세계의 4분의 3을 매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비핵화합니까? 지금 저는 핵동결로 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비핵화가 지난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은 압니다만 그러나 비핵화에 성공한 사례도 지구상에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김중로 의원 아니요, 지금 핵동결이라고요. 이제 비핵화를 하려면 어떻게 24시간 제대로 검증을 하는 절차와 과정을 만들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요. 이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원유철 의원님 말씀에 저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핵 활동이 정지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입니다. 그것이 목표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중로 의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아까 B플랜 말씀하시는데, 한미 동맹 깨지지 않도록 하겠다만 말씀하시는데 분명하게 이제 비핵화는 어려워요. 그러면 주변국이 다 핵 가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스 모겐소 같은 사람도 '핵이 없는 나라하고 핵을 안 가진 나라는 행복과 죽음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극단적인 표현을 해요. 키신저도 '핵은 핵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 그럴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만 핵을 안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국무총리 이낙연 우리는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의 동맹으로서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김중로 의원 글쎄요, 동맹도 동맹인데 0.11%라도 안보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됩니다. 한미 관계가 지금 얼마나 안 좋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중로 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 개념을 확실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국회의원 분들도 다 계시고 하지만 다 달라요. 국방부, 청와대 다르고 이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대응 개념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핵 하나 가지고 지금 속된 말로 김정은이가 세계 최고의 트럼프와 맞짱 떠요. 무기체계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ADD 특강을 전 주에 갔어요. 과학자한테 특강을 했는데 핵폭탄이 절대 무기라고 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중로 의원 핵무기 앞에서는 다른 무기의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R&D가 4.55%예요. 이 정부, 문재인 정부가 아주 이것은 잘했다고 저는 칭찬해 주고 싶어요. 세계 1위입니다, GDP의 4.55%.

그런데 이것은 절대 규모를 따져보면 미국·중국의 6분의 1이고 일본의 2분의 1입니다,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인력도 중국·미국의 10분의 1, 일본의 2분의 1입니다. 그렇게 열세입니다. 자원이 제한되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과 분산의 전략을 써서……. 맨날 뒤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추경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선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강을 하면서 분위기를 보니까 이분들의 얘기가 그런 거예요, 신명 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달라. 국가 과학기술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봐요. 저 안보 전문가지만 앞으로 미래전은 전자전, 사이버전, 우주전까지 가요. 그러면 무기체계의 싸움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할 것이냐…….

총리께서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지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있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중로 의원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있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중로 의원 그 위원회들이 전문가들 집단 속에서는 불만이 많습시다. 거기에 이념 편협적인 분들과 또 배경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지금 많고 있어서 자문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최고의 과학기술 두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카이스트와 서울대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관들을 이용해서라도 빨리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20년·30년 후에 국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KIST건 카이스트건 정부가 변함없이 지원하고

있고요.

또 아실 것입니다, R&D 예산이 사상 최초로 20조 원을 넘어섰고요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납니다. 거기다가 R&D의 행정 또는 R&D 생태계 개혁방안을 곧 내놓을 것입니다.

요컨대 긴 호흡으로 연구할 수 있게 하는 것,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연구에 임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연구에 마음 놓고 임해도 걱정이 없게 해 드리는 것, 이런 방법으로 개선방안을 내놓겠습니다.

○김중로 의원 좋습니다. 연구·교육기관을 잘 이용하시고요.

지금 마지막 말씀하시는 부분, 아무리 실패해도 도전에 대해서 정말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중로 의원 다음에 한미 동맹 정말로 굳건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늘 재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엇그제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구요.

물론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때로는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만 늘 조정해서 하나의 생각으로 중요 문제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중로 의원 이것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한미 동맹 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한미 동맹은 우리 대한민국 대외 정책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김중로 의원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중로 의원 우리나라가 이렇게 11위까지 오기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와 한미 동맹이 축이 됐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중로 의원 그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중로 의원 지난번에 상호방위조약, 한미 동맹의 근간이 상호방위조약인데 이것을 읽어 보셨는지 제가 물어보니까 ‘안 읽어 봤다’, ‘읽어 보시라’고 했는데 읽어 봤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중로 의원** 그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잘못돼 있는 부분이 뭐였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자동 개입이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지요.

○**김중로 의원** 그것에다가 하나 더 정말 중요한 것은 무기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무기한. 일본은 10년 단위로 개선을 했어요, 60년대 초에.

외교부에 알아보니까 우리나라가 맺은 조약이 3200개예요. 그중에서 미국이 250개입니다. 이것 지난번에도 제가 TF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나라가 맺은 조약이 아주 후진국이고 우리가 어려울 때 맺어진, 강대국과의 약속에 의해 맺어진 조약들이예요, 다. 외교부도 그것을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좀 TF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세계 10위에 걸맞은 조약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드세요, 총리님.

○**국무총리 이낙연** 예,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중로 의원** 거기의 하나가 미사일 지침입니다.

아시겠지만 78년도에 위کم 사령관하고 국방부장관하고 그냥 말로 한 거예요. 서면으로 한 것도 아니고 지침하고 약정 이런 정도인데…… 약정도 아니예요, 지침이지. 아무 구속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나라가 없어요. 다만 미사일기술통제체제라 해서 국제적으로 맺어진 것으로 300km 이상 500kg, 300km 이런 것을 수출을 하지 말라는 제한밖에 없어요. 북한도 지금 1만km가 넘는데 우리가 800km를 제한받을 이유가 왜 있어요?

총리님, 이것도 좀 챙겨 보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동안에도 한미 미사일 지침은 개정돼 왔습니다.

○**김중로 의원** 다음에 세종시 한번 보세요, 세종시.

저거 보세요.

정말 이거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이것은 총리님이 챙겨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건물만 지어 놓고 지금 12개 정부 부처 다 내려와…… 이제는 30년 되면 행정의 중심지이고 대한민국의 심장부예요. 수방사가 그동안에 서울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일했지만…… 거기 지금 보세요, 병력이 몇 명인지.

총리님, 비상 걸어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총리님 주관하에 토론

한번 하세요. 이것 빨리 해야 됩니다. 세종시민들 생명과 재산과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되어 있어요. 이거 정말 빨리 해야 됩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로마시대 베게티우스 장군의 말을 생각하시면서 이것 하셔야 돼요. 언제 비상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나…… 기가 막힙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최근 세종에 경찰청을 신설했습니다마는 군사……

○**김중로 의원** 경찰청 가지고 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계룡대가 지근거리에 있어서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만 더 필요한지……

○**김중로 의원** 계룡대하고는 무관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로 의원** 거기 수방사에 버금가는 훈련과 장비를 다 갖춘 1개 사단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 보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중로 의원** 그리고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전원주택 사고가 터져 있어요. 총리님, 그것 ADD 부근인데 전원주택단지로 인허가 문제에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지금 다 관여되어 있습니다, 기재부·환경부·KDI·LH·시청. 수사를 해 달라는데 수사를 안 해요. 총리님, 공무원들이 다 개입됐기 때문에…… 보고받은 적 없으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처음 듣습니다마는 금방 알아보겠습니다.

○**김중로 의원** 빨리 그거 확인해서 보시고…… 지금 전국 지자체의 80%를 민주당이 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일이 다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만 아시고 제가 구체적으로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 한번 해 보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알아보겠습니다.

○**김중로 의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정의를 떠받치는 평등과 공정이 부정되면 국가 권력에 복종할 의무가 사라지고 통치의 정당성에 저항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김중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 동안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의 심재철 의원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좌파 철학 때문에 경제는 폭망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켜주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인 안보라는 대전제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대미·대일 외교 역시 참사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이번에는 무장봉기의 폭력혁명을 노렸던 사노맹 출신 사회주의자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법을 다루는 법무부 수장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대로 놔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땀과 피와 눈물 속에 세우고 지키고 발전시켜 온 나라인데 문재인 좌파 정권에 의해 속절없이 무너지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국방부장관 나오십시오.

북한은 적입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우리의 가장 당면한 적입니다.

○심재철 의원 주적입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주적 개념은 사라졌지만 우리한테 도발이나 위협을 하면 언제든지 북한은 우리의 적입니다.

○심재철 의원 2018년 국방백서에서 적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는데 북한을 적이라고 칭합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오해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안보환경 변화 그리고 사이버를 포함해서 테러라든지 이런 위협이 굉장히 다양화됐습니다.

○심재철 의원 주변국 중에서 가장 호시탐탐 노

리는 게 어디입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지금 현재 기본적인 것은 우리는 당연히 북한이고, 그다음에 제가……

○심재철 의원 따라서 북한이 주적이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여기에서 주변국을, 다른 국가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일어난 우리 주변국들의 우리 영공 침범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재철 의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주적이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당연히 우리의 적입니다.

○심재철 의원 한반도를 공산화 통일시키자는 게 북한의 국가 목표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게 국가 목표지요? 북한의 목표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절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

○심재철 의원 그것이 바로 국군의 존재 이유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당연히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북한이 미사일을 최근에 쏘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것은 안보리에서 판단하겠지만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항상……

○심재철 의원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 결의를 하는 것은 안보리 소관 사안이라는 겁니다.

○심재철 의원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원래 유엔……

○심재철 의원 9·19 합의 위반입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9·19 합의에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심재철 의원 미사일이라고 명시가 안 됐으니까 괜찮다, 도발 아니다 이겁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은 안 드렸고 그런 9·19 군사합의는 군사적인 긴장도를……

○심재철 의원 9·19 합의에 적대행위를 금지한다는 표현 있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

○심재철 의원 적대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적대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심재철 의원 미사일 쏜 게 적대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러면 우리가 시험 개발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북한의 도발입니까,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저는 북한에서 어떠한 군사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북한의 도발입니까,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하는 의원 있음)

○국방부장관 정경두 직접적인 도발이라고는 표현할 수가 없지만……

○심재철 의원 직접 도발은 아니다, 따라서 적대행위가 아니라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북한의 군사적인 행위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적대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억지 부리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억지 논리 갖다 붙이고 있어」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런 이분법적인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어떠한 군사적인 활동을 하든지 간에……

○심재철 의원 국방은 단 1%의, 아니 1000분의 1이라도 그 위협에 대비하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따라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고자 하는 적화통일 국가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침략에 대비하는 게 국방의 제1 목표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자, 그렇다면 북한이 미사일 쏜 것은 도발이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북한의 미사일 쏘는 부분이 우리 남한 쪽으로 오면 그것은 확실한 도발입

니다.

○심재철 의원 따라서 동해상으로 쏘았으니까 도발이 아니다 이겁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도발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저는 항상 그것을 예의 주시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동해상으로 쏜 미사일 사거리에 남한이, 한국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북한이 지금 현재 단거리 미사일 쏘는 데는 짧은 길든 우리 한반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영향을 미치고 한반도가 사거리에 들어가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따라서 그 방향을 남쪽으로 돌리면 대한민국이 타격을 받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런데도 지금 도발이 아니다, 적대행위가 아니더라는 게 희한한데요.

자, 미사일 쏘는데 NSC를 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NSC가 열렸습니다.

○심재철 의원 열렸다고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심재철 의원 안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아닙니다. 다 열렸는데 그 방식을 확대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꼭 필요한……

○심재철 의원 국방부장관 당연히 참여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저는 매번 참여했습니다.

○심재철 의원 축소회의든 확대회의든 전부 다 참여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저는 다 참여했습니다.

○심재철 의원 북한이 ‘깍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댄다’ ‘사거리 하나 제대로 판정 못 해 찢찢매 웃음거리가 됐다’라고 얘기한 것은 조롱한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아주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급하고 천박하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심재철 의원 조롱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 대한 조롱입니까,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조롱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심재철 의원 또 ‘맞을 짓을 하지 말라’라고 애

기했는데 모욕입니까,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맞을 짓을 하지 말라’, 저  
도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심재철 의원 한국에 대한 모욕이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느끼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심재철 의원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르면 남  
북군사공동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항의할 수  
가 있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항의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군사공동위가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심재철 의원 누구 책임입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북한의 책임입니다.

○심재철 의원 북핵 대응 3축 체계라는 게 있지  
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킬체인, KAMD, KMPR 잘 작동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용어는 우리가 변경시켰지  
만 그 개념은 그대로……

○심재철 의원 3개 다 작동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심재철 의원 3축 체계 잘 작동합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그대로 지금 잘 진행하  
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2018 국방백서에 킬체인과 KMPR  
이 삭제된 것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삭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작전하는 요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를 변경시켰습니다.

○심재철 의원 전혀 차질이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이번에 GP 11개씩 철수했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남과 북 GP가 몇 개씩입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북한은 한 160여 개, 우리  
는 80여 개 이렇게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렇다면 각각 동수로 11개씩 했  
는데 우리보다 훨씬 저쪽에서, 2 대 1 정도인데  
11개씩 동수로 하는 게 잘못됐고 동일 비율로 했  
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단지 수치만을 비교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과학화경계시스템이

나 여러 가지 무기체계의 발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도 볼 수 있  
다고 봅니다.

○심재철 의원 대전차 장애물 철거했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안 했습니다.

○심재철 의원 경기도 북부의 대전차 장애물 철  
거 안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작전성 검토를 해서 그것  
은 작전 부대에서 이렇게……

○심재철 의원 철거했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하겠지만……

○심재철 의원 철거했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안 했습니다.

○심재철 의원 철거 안 했다고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심재철 의원 경기도 지역의 일부 도로에서 대  
전차 장애물 철거한 게 눈에 뵈는 보이는데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전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  
드리지만 대전차 장벽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  
다. 다만 지자체의 요구가……

○심재철 의원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것은 대전차  
장애물입니다.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대전차 장애물들 다 유  
지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 부분 말이 틀리면 나중에 책  
임지시겠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제가 말씀드리지만……

○심재철 의원 책임지시겠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지자체의 요구가 있어 가  
지고 작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심재철 의원 있었지요, 요구가?

○국방부장관 정경두 지역 부대장들이 판단을  
해서……

○심재철 의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판단해서 일  
부 철거가 됐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가 그것을 고의로 예를 들어서 철거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심재철 의원 현재 국방개혁 2.0이라지 9·19 군  
사합의에 의해서 부대와 병력이 축소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그것은 2006년 우리가  
국방개혁을 시작하면서부터 인구가 급감하고 있  
기 때문에 병력은 50만으로 줄이는 작업을 현재  
그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대한민국 군대 훈련 잘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잘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PPT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봐 주십시오.

PPT 보셨습니까?

저게 유격훈련입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저 부분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산 높은 고지에 있으면서……

○**심재철 의원** 전방 모 사단에서 있었던 유격훈련장인데 저렇게 불풀 놔두고…… 이게 청소년 캠프입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잘못된 부분은……

○**심재철 의원** 잘못됐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다시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육군본부에서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고치시겠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고쳐야 된다면 고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고쳐야 된다면이 아니라 고쳐야 되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부대에서 판단해서 할 것이라고 봅니다.

○**심재철 의원** 9·19 남북군사합의 때부터 군대 정신부터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격훈련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렇지 않습니다.

○**심재철 의원** 자, 만일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종전선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종전선언을 하면 그 뜻이 뭐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전쟁이 종료된다는 뜻입니다.

○**심재철 의원**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심재철 의원** 유엔군 문제는 어떻게 되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대로 다 존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전쟁이 끝났으니 유엔군은 이미 역할이 끝났다, 나가라’ 이런 얘기 안 나올까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종전선언하고, 예를 들어서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라든지 단계가 다 나뉘어 있는데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유엔사가 해

체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심재철 의원**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평화협정을 먼저 할 수도 있지요.

평화협정을 하더라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을 때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북한이 지금 3000t급 잠수함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3000t급이면 SLBM 발사가 가능하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언론에 세 발 정도 장착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한미 정보당국에서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SLBM이면 미국도 타격 가능하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지금 현재 거리상으로는 미국까지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잠수함이 미국 인근 근해까지 갔을 경우에는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얘기 들어 보세요. 동맹보다 국익이 우선이다, 동맹보다 국익이 우선이다, 맞는 말입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좀 표현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청와대 관계자가 ‘동맹보다 국익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부적절하다고 호되게 야단을 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제가 야단을 칠 수 있는……

○**심재철 의원** 전달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전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정훈교육 때 6·25, 장병들한테 잘 설명합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심재철 의원** 정훈교육을 할 때 6·25, 장병들한테 잘 설명을 합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PPT 하나 띄워 주십시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라는 챕터 자체가 지금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그다음 챗터요.

그리고 옛날에는 저렇게 6·25 전쟁이라는 챗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기습 남침을 감행했다’ 딱 한 줄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다른 것 하나 좀 보여 주십시오.

저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정훈교육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교육 교재는 많은 사람들의 감수를 거쳤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의 이종명 의원께서도 군 출신입니다. 직접 보고를 받으시고 정신교육 교재가 잘 작성됐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정신전력이 나약해지거나 그런 교육 시키지 않습니다.

○**심재철 의원** 정훈교육 교재 자체에서부터 저렇게 대폭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점 묻겠습니다. 김원봉이는 48년에 스스로 월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6·25 때 북한 국방장관격인 국가검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활동한 게 조선의용대인데 조선의용대가 국군의 뿌리입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광복군 전체를 우리가, 독립군이나 광복군을 국군의 뿌리라고 그러는 것이 조선의용대나 이런 하나의 어떤 개인 단체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재철 의원** 조선의용대 김원봉이가 국군의 뿌리입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김원봉 개인이 국군의 뿌리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심재철 의원** 따라서 정부에서 얘기한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됐다’라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를 들어서 김원봉이나 조선의용대가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됐다는 용어를 국방부에서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국방부는……

○**심재철 의원** 국군 창설의 뿌리는……

○**국방부장관 정경두** 독립군이나 광복군이나……

○**심재철 의원** 46년에 했던 남조선경비대가 국군의 뿌리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가설을 가지고……

○**심재철 의원** 설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아니,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원칙적으로 지금 제시하는 사안과 다른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것은 우리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이나 광복군이나 이런 것은 국군의 뿌리가 될 수 있지만 하나의 어떤 개인이나 단체를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김원봉이는…….

○**심재철 의원** 따라서 김원봉에 대한 서훈이랄지 복권 추진은 잘못된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김원봉이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북한 정권에 기여를 했고……

○**심재철 의원** 핵심이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기여를 했고 그다음에 남침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김원봉이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서훈 대상이나 이런 게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한미 연합훈련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안 해도 됩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조정된 방식을 적용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다 약속된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심재철 의원** 올해 실제 야외 기동 한미 합동 훈련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다 지금 조정된 방식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무슨 훈련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훈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0여 개가 되고……

○**심재철 의원** 독수리 훈련에서 한미 연합훈련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독수리 훈련이라고 그러는 것은 여러 가지 훈련을 묶어 가지고 ‘독수리 훈련’이라고 표현했는데, 독수리 훈련이라고 우리가 표현 안 하더라도 날개의 그런 훈련들은, 개별 훈련들은 조정된 방식으로 해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심재철 의원** 전작권은 조기 이양된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전작권은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서 조건 충족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전작권이 우리한테 전환이 되면 한국군이 미군을 지휘하게 됩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전작권이 전환되면 우리 4

성 장군이 미래연합사령관이 되고 미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이 되게끔……

○**심재철 의원** 부사령관이 되지요. 따라서 우리가 지휘하게 되는 건데……

항공모함 그다음에 원자력잠수함, 핵폭탄, 우주 전력 전혀 우리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데 지휘가 가능합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지휘가 가능한 것은 거기 참모진들이 그대로 다 구성이 되기 때문에 참모진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9·19 군사합의가 우리한테 보탬이 됩니까, 우리 국방에?

○**국방부장관 정경두** 9·19 군사합의는 우발적인 그런 군사적인 충돌을 방지해서 긴장도를 높이지 않도록 해서 정부가 진행되는,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 국방당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완벽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이행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 가장 취약한 게 지금 전방 지역의 경찰이 없어진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경찰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일부 조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다……

○**심재철 의원** 조정이 훨씬 약화된 거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일부 저하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조정된 그런 정보자산을 이용하고 조정된 방식을 해서 과거나 지금이나 정상적으로 정보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건 거짓말입니다.

○**국방부장관 정경두** 정상, 정확한……

○**심재철 의원** 9·19 군사합의는 대한민국 국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실상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성 문서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렇지 않습니다.

○**심재철 의원**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렇지 않습니다.

○**심재철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고요.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인권문제 중요합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심재철 의원** 대한민국의 북한의 인권에 대한 정책은 됩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구체적으로 인권정책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그렇지 않습니다.

○**심재철 의원**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실질적인 인권을 개선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포괄적 인권 개념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북한에 인권 개선하라고 우리가 요구한 적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인권 개념은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심재철 의원** 문제 제기를 안 했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그렇지 않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동안에 문제 제기한 적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북한 인권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심재철 의원** 북한 당국에 직접 얘기한 것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남북회담에서도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회권 문제라든가……

○**심재철 의원** 문서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

○**심재철 의원** 실질적으로 북한 당국에 대해서 인권 개선을 요구했다는 것을 문서로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김연철** 아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인권 개념과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인권 개념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러니까요. 일단은 어쨌든지 간에 제출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세 번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의제가 들어갔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포괄적 인권 개념에 보면 인도적 지원의 문제라든가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남북공동선언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북한 인권문제가 안 들어갔었지요. 의제감이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도 인권의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제사회의 인권 개념에도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의원** 정치범수용소에 몇 명이나 수용됐다고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심재철 의원** 대강 몇 명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제가 그 숫자를 지금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재철 의원** 10만 명 넘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추후에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관심이 없으시군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그렇지 않습니다.

○**심재철 의원**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미사일을 열 차례 도발을 했는데 유엔 대북제재 물품을 북한에 반출한 적이 있지요, 그 사이에?

○**통일부장관 김연철** 그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어허!

○**통일부장관 김연철** 대한민국은 전략물자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장 모범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유엔 대북제재 물품 18억 원어치를 벌써 반출했는데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어떤……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기계류, 광물성 연료에너지, 철강제품 등. 그래서 지금까지 3년 동안에 1020만 5000불, 무려 122억 원어치를 했는데…… 안 됩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정부는 제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제재 면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대북 석유 반출 안 했다 이거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그런 부분들은 연락사무소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제재 면제 절차를 밟거나……

○**심재철 의원** 어쨌든 석유 반출은 신고했어야

되는 사항이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당연히 그것은 제재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진행……

○**심재철 의원** 그런데 안 했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했습니다.

○**심재철 의원** 신고를 안 했지요, 석유 반출?

○**통일부장관 김연철** 그것은 연락사무소는……

○**심재철 의원** 그래서 유엔 대북제재의 전문가 패널에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그것은 유엔 전문가 위원회에서 노트(note) 했습니다. 그래서……

○**심재철 의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노트가 바로 지적입니다. 주의해라.

○**통일부장관 김연철** 우리 정부는 그런 부분들은 제재위원회의 제재 규정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외교 분야 관련된 이 협정에 준해서 했다는 부분들을 충실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심재철 의원**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조국 씨가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총리께서 제청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제청했습니다.

○**심재철 의원** 잘 한 결정입니까, 부적절한 결정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저의 의견을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 저의 의견을 포함한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셨습니다. 저는 그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심재철 의원** 사퇴를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지금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게 되고 있는데요 머지않아서 가닥이 잡힐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도 머지않아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물론입니다.

○**심재철 의원** 국민들은 그래서 사퇴를 외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알고 있습니다. 또 반대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검사한테 전화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것을 형사소송법상의 당연한 권리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택을 압수수색 할 때는 주거주의 참여가 보장되

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거주가 현직 장관이기……

○**심재철 의원** 법무부장관은 개별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휘를 할 수가 없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지휘라고 해석……

○**심재철 의원** 그것이 검찰청법이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지휘라고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러면 청원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재철 의원** 부탁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심재철 의원**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현직 장관이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검찰청법에 따르면 직접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검찰청법 위반이고 직권남용 아닐까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법률에 어긋나므로 탄핵 사유가 되는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형사소송법상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에 여러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심재철 의원**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에 김용판 서울청장이 권은희 수사과장한테 전화했다는 것 때문에 조국 씨는 당시 ‘김용판 즉각 구속 수사가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조국 씨 본인한테 해당 안 될까요?

○**국무총리 이낙연** 이번 경우는 조 장관이 그 압수수색 대상인 가옥의 주거주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주거주가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주거주가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것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그런 말씀에 대해서 국민들은 쾜변이라고 느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심재철 의원** 북한이 간첩을 보내는 것은 적대 행위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것은 우리 국내법에도 위반되는 일입니다.

○**심재철 의원** 9·19 합의 이후에 북한이 간첩 보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평상시와 똑같이 방첩 활동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간첩 잡았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뚜렷이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일부러 놓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재철 의원** 올해 6월 국정원과 경찰 합동수사로…… 북한이 네팔 국적으로 세탁한 경찰총국직과 간첩 40대 박 모 씨를 보냈고, 파견했고 검거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 검거 활동을 했다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재철 의원** 아까 모르신다면서요?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제가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심재철 의원** 간첩을 검거했으면 통상 잘 했다고 포상을 하든지 휴가를 주든지 격려를 하게 마련이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당연한 업무로 봐야 될 것인지……

○**심재철 의원** 당연한 업무라 하더라도 간첩 잡으면 칭찬해 줘야 마땅한 거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이 소식을 밖으로 뺐느냐, 유출했느냐라며 내부 조사를 하게 했던 것이 이 상황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아마도 대외 공개에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북한에 대해서 남과 간첩 보내는 데 대해서 재발 방지, 사과를 요구할 생각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런 문제가 적절한 기회에 서로에게 주의를 주는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이라면 북한에 대해서 사과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좀 파악을 해 보고 나서 생각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작년에도 직과 간첩을 한 명 잡았습니다. 전혀 언론 보도가 안 됐습니다.

보도 안 하는 게 마땅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대북 관계에서는 공개되지 않는 것도 상당수가 있고요 또 공개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작년에 경찰청에서 국가보위성 소속의 간첩을 잡았고 이미 법원 판결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쉬쉬 입을 닫고 있습니다. 왜 그러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 고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의원** PPT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특별히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심재철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PPT 저게 지금 2005년에 산림청에서 도서지역 국유재산 실태조사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 PPT 보면 해수부가 2010년도에 함박도 실태조사 보고서를 냈던 게 있습니다.

함박도는 한국 땅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NLL 이북에 있는 것으로 정전협정 때부터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심재철 의원** 한국 땅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북한이 그러면 차지하고 점령해도 마땅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1953년 정전협정 당시에 그 섬은 NLL 이북에 있었습니다.

○**심재철 의원** 2005년, 2010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조사했던 것은 그러면 잘못 조사한 거네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은 1978년이었던가요? 강화군의 잘못된 행정착오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아니, 그렇더라도 2005년, 2010년에 산림청, 해수부에서 조사한 것이 그러면 정부에서 잘못된 것이네요?

○**국무총리 이낙연** 잘못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잘못된 행정을 토대로 했다면 그것 또한 잘못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심재철 의원**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됐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정부 수립은 1948년이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은 1919년입니다.

○**심재철 의원** 언제 건국됐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임시정부 수립은 1919년, 정

부 수립은 1948년입니다.

○**심재철 의원** 저는 건국을 묻고 있습니다.

언제 건국됐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건국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모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모른다가 아니라 논의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심재철 의원** 논의가 있다는 게 뭐가 논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임시정부 수립은 1919년입니다.

○**심재철 의원** 대한민국은요?

○**국무총리 이낙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1948년입니다.

○**심재철 의원** 대한민국 자체는 언제 나왔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대한민국헌법이,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진 건 1948년인데요, 임정 헌법이 만들어진 건 1919년입니다.

○**심재철 의원**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됐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은 의원님의 생각인 것으로 존중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3·1운동 100주년, 공동으로 기념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심재철 의원** 북한으로서는 3·1운동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때의 역사적 사실 때문에 또 북한 지도층의 일제강점기 시절의 행적 등에 대한 고려 때문에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조국 씨 집의 PC와 관련해 가지고 ‘피의자의 PC 반출이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존용이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무슨 말인지 처음 듣습니다.

○**심재철 의원** 검찰이 증거인멸을 조작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따라서 이 말을 한 사람 말이 잘못된 거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무슨 말인지 처음 듣기 때문

에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조국 씨 집을 압수수색을 했던 것이 증거 보존을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냐, 맞는 말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검찰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심재철 의원** 아니요. 자기들이 PC를 반출하게 했던 것이, 정경심 교수가 대학에서 PC를 반출하고 했던 것들이 증거인멸이 아니라 보존이다……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함부로 규정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심재철 의원** 파악해 놓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먼저 파악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파악한 뒤에 그러면 서면답변 해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의원실에 보내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 부탁드립니다. 차관이시네요.

우리가 추구하는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입니까, 한반도 비핵화입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한반도의 비핵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북한 비핵화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북한 비핵화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심재철 의원** 한반도 비핵화면 남쪽에 들어 있는 미국 자산, 핵 자산들도 물러가라 이 얘기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북한 비핵화입니까, 한반도 비핵화입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지금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따라서 북한 비핵화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그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심재철 의원** 한반도 비핵화, 역시 좋은 표현입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한반도 비핵화란 말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잘못된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우리는 FFVD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그것이 완전한 비핵화 같은 개념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우리도 지금 FFVD라는 기준을 받아들이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완전한 비핵화라는 데는 한미 간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러니까요. 북한 비핵화는 FFVD가 되어야 된다는 데 인정하시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그것도 포함해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데 한미 간에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도 충분하다…… 충분합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아니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심재철 의원** 그래서 지금 미·북 간의 회담이 깨졌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폐기로 충분하다고 말한 적이 있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그것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그러면 뭐라고 했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기본이 영변 핵시설 폐기로 됐다, 그것이 기준이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영변 핵시설 폐기가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완전한 비핵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트럼프는 북한 미사일이 단거리라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괜찮다기보다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것이 미·북 간의 그런 합의의 위반이 아니냐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미국에 영향 없으니까 괜찮다 이 말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그러니까 괜찮다는 말씀보다는 미·북 간의 합의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직접적으로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한 것으로……

○**심재철 의원** 한미 연합훈련은 돈이 든다, 그래서 폐지했습니다. 잘한 것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잘했다는 것보다는 북·미 간의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한미 간의 연합훈련은 조정된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러니까 조정된 것이 결국은 괜찮은 결과를 낳은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조정된 형태로 함으로써 북·미 간의 대화와 비핵화에 진전이 있는 방향으로 기여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빅딜과 스몰딜과 단계적 접근 중 어느 게 낫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그런 방법론에 관계없이 어떤 방법론을 쓰든지 최종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빅딜이 맞지요, 그래서?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빅딜이 맞다, 스몰딜이 맞다는 말씀보다도 어떤 방법론이든 간에 최종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동맹을 하지 않고 북·중·러를 상대로 해서 자주국방이 가능합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현대에는 어느 나라든 완전한 자주국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동맹 필요하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동맹을 하면서도 자주국방을 지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한미 동맹 관계는 이전에 비하면 동일합니까, 약화됐습니까, 강화됐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강화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중국의 ‘일대일로’와 ‘중국몽’에 우리가 동참 선언을 했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저희들이 동참 선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심재철 의원** 그러면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거기에 저희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같이할 수 있다는……

○**심재철 의원** 함께하는 게 동참 아닌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전면적으로 그것에 동참한다는 그런 식의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심재철 의원** 부분적으로라도 동참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저희들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그것은 같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재철 의원** 한미 동맹을 줄이면서 한중 관계를 중시하는 것, 가능합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그것은 그런 제로섬적인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는 한미 동맹도 강화하면서 또 한중 간의 관계도 발전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GSOMIA 파기는 한국이 동맹보다 자주를 중시한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 아닌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심재철 의원** 해리스 대사를 초치하고 내용을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항의한 꼴인데 잘한 일입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그것은 잘했다는 것보다는 한미 간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이견에 대해서는 동맹의 정신하에서 이견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러한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결국 그것이 동맹국 한국한테 최소한의 의리나 예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인식은 미국에 줄 수 있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저희로서는 그런 생각은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희상** 심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김해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55만 국군 장병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김수로왕과 인도에서 건너온 공주 허황후의 세기적 만남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가야왕도 경남 김해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입니다.

이낙연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군 출신이자 법조인으로서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보 관련 질문에 앞서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서 한번 총리의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들을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요. 고발하고요. 수사기관은 그것을 받아서 또 수사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의 유출이나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의혹이 확산됩니다. 정치권은 또 이를 받아서 정치공세를 강화하면서 정쟁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정치 행태, 갈등의 악순환…… 정말 우리 한국 정치의 사법화, 어떻게 이것을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검찰의 정치화의 원인에, 배경에 정치의 사법화가 있다 하는 의원님의 지적에 동감합니다. 정치권이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에 가져가는 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검찰이 정치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점점 크게 만들어 졌다 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검찰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수단과 방법, 과정을 지켜 가면서 본연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검찰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도록 정치권이 마음을 모아서 가장 올바른 개혁 방안에 합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홍철 의원 지난 23일 뉴욕에서 아홉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지요. 북핵 관련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언론과 전문가들의 평가가 좀 있습니다. 또 북핵 회담을 향한 실질적 진전을 위한 방안 또 새로운 방식이 논의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된 새로운 방식과 또 북한에서 지금까지 주장한 새로운 셈법, 접근성은 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기를 바랍니다마는 저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불턴 보좌관을 교체하고 그 뒤에 하신 몇 가지 말씀으로 유추해 보자면 좀 더 현실성이 높은 방향으로 전환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하고 짐작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홍철 의원 그동안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겼다,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공격적인 발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

을 통해서 그러한 비판을 불식하고 한미 동맹이 여전히 굳건하고 동북아 안보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하였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특히 더 나아가서 상호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지속·강화하기로 확인했다, 그리고 흔들림이 없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도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한미 동맹에 대한 여러 우려는 나름의 충정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한미 동맹은 우리 대외 정책의 핵심 중의 핵심에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 이것 또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홍철 의원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비판적으로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이제 올해 연말까지 3개월, 약 100일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나 김정은 위원장의 대내적인 약속으로 볼 때 시간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아주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운명의 100일, 정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연내라고 하는 일종의 시점이랄까요 하는 것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북·미 간 실무접촉을 9월 하순에 갖는다, 9월 말에 갖는다 하는 것 또한 양쪽에서 얘기가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접촉이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빨리 접촉이 되어서 이번에는말로 지난번 하노이회담에서 이루지 못했던 또는 하노이회담에서 이루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은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유엔총회에 대통령께서 가셔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신 것처럼 북·미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도울 일이 있으면 뭐든지 돕겠다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민홍철 의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9월 25일 새벽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연속 3회 유엔 기조연설을 하면서 DMZ 평화지대

구상을 제안하였습니다.

완전한 종전을 통한 전쟁불용, 남북상호 안전 보장, 공동번영을 통한 진정한 평화라는 3대 원칙을 제시해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도 일어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한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완전한 종전을 통한 체제 보장보다는 낮은 단계이지만 국제사회의 참여로 북한의 체제 안전과 안전 보장을 담보하는 액션플랜으로서는 유효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그리고 또 북·미 비핵화 회담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하나의 구상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평화지대 구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정부에서 준비하고 또 대비하실 생각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 유엔총회에 150여 개 국가의 대표가 연설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다 본 것은 아니고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연설 중에서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그 부분에서 객석의 박수가 나왔던 것을 아주 인상 깊게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국제사회가 그만큼 그 제안에 대해서,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감응을 했다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2차대전이 끝나고 냉전의 과정에서 남북한이 총부리를 겨누고 동족 간에 죽이고 했습니다만 그 대결의 최전선, 가로세로 길이로 250km, 너비로 4km 이 지대가 오히려 지구에서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는, 가장 오래 보존되고 있는 생태지구이자 평화를 상징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그것이야말로 유엔의 꿈이 바로 이 한반도의 허리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데 대해서 유엔 회원국들이 감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로서 지금부터 필요한 일들 하나씩 챙겨가면서 그 꿈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홍철 의원 그리고 우리가 한미 동맹에 대해서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국익이 우선이냐, 동맹이 우선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논란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맹을 맺고요 동맹을 통해서 우리의 국익을 또 실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국익을

위해서 동맹도 맺는 것이고요 또 국익의 실현을 위해서 동맹을 더 공고히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냐. 당연히 국익이라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리고 동맹은 그 목적과 떼어 수 없는 우리의 국가정체와 비슷한 상태인 것이지요.

○민홍철 의원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 때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동맹도 진화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한반도의 안보상황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 또 미국의 아태, 인도양의 전략에 따라서 함께 우리의 동맹도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든지 SOFA 협정 이런 부분도 시대상황에 맞게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상호 호혜적으로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한미 동맹이 늘 불변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지난 66년 동안 한미 동맹이 변화해 온 발자취를 보면 이미 많이 진화해 왔던 것이지요.

금년 봄이었습니까? 한국 대기업이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 케미컬 회사에 거액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바로 그 준공식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서 백악관 보좌관이 그것을 대독한 적이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당신 취임 이후에 해외로부터의 최대 규모의 투자 가운데 하나인 이 투자야말로 한미 동맹의 승리의 증거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을 제가 아주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일방적으로 돕고 모든 면에서 우리를 지원했던 그 미국이 이미 이제 한국 기업의 큰 투자를 받으면서 이것이 바로 한미 동맹의 승리다, 성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미 동맹의 발전이고 진화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진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홍철 의원 총리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국방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국방백서나 군사목표 중에 '주적'이라고 표현하는 개념 설정을 공개적으로 설정한 나라가 있나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없습니다.

○**민홍철 의원** 그래서 우리도, 여러 나라가 미국도, 미국은 우리와 같은 국방백서는 아니지만 리포트를 발행하고 있고요 일본도 발행하고 여러 나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국가 중에서 주적이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한 나라는 없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대부분 외국에서는 ‘위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홍철 의원** 지금 남북군사합의서에 서명한 지 1주년이 넘었습니다. 그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남북군사합의서는 그동안 약 70년 정도 남북 간의 대립과 갈등 분쟁으로 점철되어 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군사적으로 긴장도를 낮추어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외교적인 평화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9·19 군사합의가 체결됐고 지금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실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홍철 의원** 현재 남북군사합의서의 하나의 성과로 유해발굴 사업을 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민홍철 의원** 그 화살머리 고지의 유해 발굴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여러 가지 유해 발굴한 것은 4만 점 이상을 했고 실제 유해 자체도 거의 200구 가까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인지 식별된 것들도 있고 또 프랑스의 유해라든지 유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견되어서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참전했던 유엔 국가들에게도 상당히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홍철 의원** 그렇습니다. 저는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서 효용성을 폄훼하고 특히 무장해제가 됐으니 수도권 방어가 뚫렸으니 이런 방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60만 우리 군 장병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계없이 우리의 대비태세는 완벽한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렇습니다. 대비태세는 완벽한 가운데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홍철 의원** 그리고 북한의 도발 현황도 마찬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 박근혜정부 때 북한의 대남 침투 및 도발 현황을 보니까 NLL 침범이 42건, 무인기 도발이 6건, 총격 도발이 6건 등 크고 작은 도발이 69건이나 됐습니다.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대남 침투 및 도발 건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지금 현재 대남 침투나 도발이나 이런 어떤 위협행위를 가한 것은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홍철 의원**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부터 20일까지 한미합동훈련 하면서 전작권 전환 기본운용능력(IOC) 훈련을 하셨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IOC 검증 연습을 했습니다.

○**민홍철 의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지금 현재 한미 검증팀에서 분석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일단 초두보고는 받았습니다.

○**민홍철 의원** 그리고 이제 조건에 기한 전작권 전환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조건, 우리 군은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또 거기에 여러 가지 현안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한측과 미측 검증단이 구성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 하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평가를 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건 충족 여부를 검증을 해서 전작권 전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홍철 의원** 전시작전통제권은 반드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70년 동안 군사주권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다른 나라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세계 역사적으로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반드시 전환을 해야 되고요. 착실히, 차질 없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국군으로 전시작전권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금 일부 그런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유엔군의 지위와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측의 의도가 어떤 건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민홍철 의원** 그래서 우리 한미합동사령부를 유엔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지휘 관계를 또 다시 유지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국방부에서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아주 잘못된 그런 내용이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서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유엔사의 역할과 지위에 관계된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도 유엔사는 기본적으로 우리 한반도의 정전체제 유지, 그리고 전시가 되면 전력제공국들의 그런 어떤 전력제공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협조해 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 일반적으로 지금 잘못 알려진, 전작권이 전환되면 유엔사를 통해서 연합사를 지휘할 것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도 타당하지가 않고.

현재 에이브럼스 사령관도 계속해서 누차 강조를 했지만 그럴 의도는 없다, 그리고 이 이전에 스캐퍼로티 연합사령관 때도 실제로 공식 문서를 통해서 그럴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에서 제기된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잘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의원** 유엔사의 역할과 지위는 북·미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종전체제가 되고 평화체제가 되면 유엔군의 역할, 이 부분도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국방부는 특별히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이 있나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반도에 그런 정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정착이 되면 이제 유엔사가 해체되어도 된다는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는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하여튼 유엔사의 기본적인 그런 임무와 역할과 기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민홍철 의원** 그리고 유엔사의 전력제공국의 확대 움직임, 특히 일본으로 확대하겠다…… 일부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어떻게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전력제공국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는 6·25전쟁 유엔 참전국 16개국 중에서 14개국과 그다음에 의료지원을 했던 6개국 중 3개국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17개국이 전력제공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지도 않은 국가들이 유엔사에 들어온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되거나 동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유엔사 전력제공국 확대와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유엔사와 우리 그다음에 그 확대를 원하는 당사국과 우리의 협의가 진행되어서 우리가 동의된 가운데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본과 관련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홍철 의원** 그렇지요.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 5월 4일부터 9월 초까지 북한의 10여 회에 걸친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의 정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기본적으로 한미 정보당국 간에 긴밀하게 공조를 하면서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탐지자산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2대 그리고 이지스 구축함 3대, 이 자산이 지금 현재 있는데 이것이 좀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북한의 미사일 또 SLBM이나 이런 것들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를 확보하는 문제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이지스 구축함도 3척을 추가로 지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력화가 되면 탐지 자산들은 확실하게 보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현재 KTMO CELL이 주·예비 두 군데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고 지금까지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을 때 한 번도 탐지 실패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능력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지금 성능 업그레이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되면 충분히 그것이 가

능할 것이고 방어자산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M-SAM Block-II, 쉽게 말하면 탄도탄 요격이 가능한 그런 중거리 요격체계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에 이어 가지고 L-SAM 그리고 또 구축함에서, 우리 함정에서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중기계획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런 방어자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 유사시, 전시상황이 되어서 만일에 다수 발사되는 상황이 왔을 경우에는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격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이런 작전수행 개념 그리고 그런 무기체계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홍철 의원** 어느 나라든지 군사주권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무기체계라든지 시험발사 또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도발의 고의성, 의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9·19 군사합의, 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합의의 위반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판단하는 문제도 과연 그게 군사주권 범위 내에서의 활동이냐 아니면 고의적인 도발의 의지를 갖고 하는 거냐, 이렇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합의의 위반이냐, 아니냐 이렇게 놓고 볼 때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래서 남북군사합의서에 명시된 그런 문구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도 다른 의원님 질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도발이냐 아니냐 이런 이분법적인 것을 떠나 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국방 차원에서는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에게 모든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대응하고 준비를 하고, 하여튼 미래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작전운용시스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이런 우발적인 충돌 상황을 막고 군사적인 긴장도를 낮추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이 1년 동

안 이게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잘 발전돼서 그야말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때까지 국방이 해야 될 부분은 완벽하게 군사대비태세 유지하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홍철 의원** 그리고 또 하나의 현안이 지금 주한미군 기지 반환 문제 아닙니까? 26개 기지가 반환될 예정에 있는데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4개 기지를, 원주와 부천, 인천, 동두천에 있는 기지를 반환받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환경오염 여부, 정화비용이거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환경오염 문제는 한미 간에 오랫동안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좁히기 위해서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2010년이나 11년부터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도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최대한 빨리 이것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환경오염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한미 동맹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잘 합의가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홍철 의원** 혹시 환경 정화비용과 관련해서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 측에서 어떤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아직 그런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민홍철 의원** 그리고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통보한 지 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에서는 일부 보도를 보면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 못 했더라는 어떤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일본 측에서 어떤 협의 요청이 온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저희 국방부에 GSOMIA 연장에 대해서 요청을 한 것은 없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런 뜻은, 뭐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뜻은 계속해서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향 표시 이런 건 있었다는 말씀드리지만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많은 참모들은 GSOMIA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향

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민홍철 의원** 그렇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관계 속에서 GSOMIA를 영구히 폐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입장, 어떻게 이것을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잘 하시겠지만 우리 정부도 많은 영향요소에 대해서 심도 깊게 많은 논의를 하고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 자체가 일본이 수출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시키면서 안보 신뢰 문제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부가 이런 결정을 했는데 일본에서 현재 입장을 빨리 전향적으로 바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홍철 의원** 그리고 함박도가 지금 화제, 관심의 대상입니다. 지난 1978년도에 행정적으로 정리하면서 강화군으로 등재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조치에 따라서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민홍철 의원** 그런데 문제가 비록 정전협정 제2조에 따라서 NLL 북쪽에 있다 하더라도 1978년도에 행정적으로 우리 관할로 된 문제거든요.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게 그때부터 우리 군은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도 설정하면서까지도 왜 그동안 40여 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 그 지역에 대해서 현장조사나 또 초소를 관측소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행위를 안 했는지, 하려고 노력을 안 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사실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으로서 굉장히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저는 함박도 문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관할권 문제인데 저희가 현재 과거 모든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최근에 유엔사의 공식 문서를 받은 거에도 사실 관할권 자체는 정전협정 때부터 NLL 선을 긋고 할 때 어떤 모든 것들은 북한의 관할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조치가 저희뿐만 아니고 국방부뿐만 아니라 국토부, 산림청 그다음에 또 지자체 강화군 또 문화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현장조사 없이 왜 이렇게 행정조치가 잘못돼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현재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국방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 합동 검증팀을 구성해 가지고 정말 왜 처음부터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는지를 검증하고 그런 부분이 검증되면 우리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적인 대비태세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에 시설공사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면밀하게 우리가 항상 동향을 확인하면서 대비태세는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홍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외교부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진행 중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민홍철 의원** 그런데 미국이 산정하는 분담금에는 전략자산 전개나 훈련, 연합훈련 같은 동맹비용도 포함하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민홍철 의원**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SOFA 제5조의 예외사항이지만 또 예외가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것은 SOFA 협정 위반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항목들은 본래의 방위비 분담 협상—SMA라고 하는데요—그 틀 내에 속하지 않는, 그것을 벗어나는 범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홍철 의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요구한다면 전혀 새로운 협정으로서 국회의 동의까지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그래서 기존의 방위비 분담 협상의 대상으로서만 논의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홍철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 강하고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는 보수와 진보 그리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남북 군사합의 이전과 이후 어느 쪽의 안보가 불안했습니까? 남북한이 분단 이후 70년 넘게

유지해 온 적대와 대립의 관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대로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남북한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해서 항구적 평화가 정착된 새로운 한반도 질서를 만들어 내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무책임한 안보 불안 심리를 조장해서 어렵게 조성된 평화의 새싹을 자른다면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떻게 그 책임을 질 것입니까? 안보에서만은 보수와 진보 그리고 여야, 당리당략을 따지지 말고 국민과 국가의 안전과 미래만을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민홍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공주·부여·청양 출신의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의원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공주·부여·청양 출신 자유한국당 정진석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서회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지레 겁먹고 쫓지 말자’, 이 말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SNS에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독려하면서 쏟아 낸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정부에 누가 서회고 누가 이순신입니까? 이 정부에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한 겁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일 중요한 외교 참모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서로 언쟁을 하면서 할퀴고 싸웁니다. 그것도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말이지요. 이런 희한한 광경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참으로 경험하지 못한 그런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김정은의 숨통을 틔워 주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 완화를 외쳤습니다. 서방 주요 정상들은 비핵화가 먼저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난 6월 판문점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만남을 사실상의 미·북 종전선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도가 한참 넘은 건강부회입니다. 근거 없는 평화 낙관론을 앞세워서 북한 관련해서 허장성세가 너무 지나칩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북한의 비핵화를 얼마나 진전시켰습니까? 문 대통령이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외치는 동안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 위상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폐기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뿐일 것입니다.

자,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치 분야 질문에서 총리님 답변을 제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들 사이에 싹텄다, 특히 가진 사람들이 제도를 자기의 기회로 활용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한다’, 저는 총리의 이런 답변이 매우 솔직하고 용기 있는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하시자마자 다소 다른 결의 말씀을 내놓으셨어요.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팀 검사와 통화한 사실 같은 것, 또 강기정 수석이 검찰에 조용히 수사하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 없이 검찰 쪽에만 메시지를 던지신 겁니다. 윤석열 검찰을 향해서 첫 경고성 발언을 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데 저는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사법 방해고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직권남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저께 총리께서 내놓은 그런 발언의 뉘앙스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어제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수사, 특히 가택 압수수색은 과도한 것

이었다 하는 여론이 더 많다 하는 말씀을 어제 드렸었는데요. 검찰이 옳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 저는 ‘조국 게이트’, ‘조국 사태’로 불리는 이 어려운 문제가 이미 결론이 내려졌 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쪼록 대통령이 국민 편에 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경제적인 시각이나 태도가 지나치게 편향적이십니다. 그게 참 아쉽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조국 사태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일입니다. 총리께서도 언급하셨듯이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 카오스를 겪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지요.

어디까지나 대통령은 국민 편에, 상식 편에, 정의의 편에 서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 점을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무겁게……

**○정진석 의원** 검찰개혁을 강조하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을 강조하시는 것에 100% 공감하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우리 국회에서 앞으로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법개혁은 국회 입법으로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충실히 의무를 다할 테니 국회에 맡겨 주시기 바라고, 다만 지금 피의자에서 범법자 신분으로 전환돼 가고 있는 조국 씨는 빼고 검찰개혁을 논의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외교·안보 현안을 좀 묻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총리님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정진석 의원** 그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어떤 대목이었을까요?

**○정진석 의원** 아마 공동발표문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다만 공동 기자회견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측 발표가 없어서 제가 미국 국무부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띄워져 있습니다만 거기에 합의문이, 합의사항이 아주 자세히 기술이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미 양국은 정보 공유, 고위 정책 협의, 종합훈련 등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위해 일본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공유 안보협력 이것은 GSOMIA를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 해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요. 지금도, GSOMIA 종료를 선언한 이후에도 정보 공유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 어쨌든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 한미 동맹의 중요성 그 가운데 한미일의 삼각 안보협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GSOMIA의 중요성 이것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으로, 합의사항으로 적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본이 수출규제를 결정하고 한일 간의 경제 분쟁이 시작되었고 여권에서부터 GSOMIA 파기를 대일 보복 카드로 활용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GSOMIA 파기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GSOMIA 종료·파기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것은 6월 29일의 한미 정상회담의 약속을 우리가 깬 것이지요. 미국 정부가, 미국이 이례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 김현종 안보 2차장은 미국 측에서 이해를 했다고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미국 측은 이해를 하기는커녕 고위 당국자가 계속 연쇄적으로 나와서 강한 불만과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답변드릴까요?

**○정진석 의원** 예, 말씀하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GSOMIA에 관해서는 백악관과 청와대 사이에 여러 차례의 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GSOMIA 종료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백악관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그 동안에 소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미 정상회담 결과문 그것이 바로 GSOMIA 유지와 동의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GSOMIA 종료가 발표된 이후에도 한미일 3국 간의 정보 공유는 이루어지고 있고 안보협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 GSOMIA를 왜 체결을 한 겁니



까, 총리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이유를 낸다면 뭐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일본 스스로가 한국을 안보 상 믿을 수……

○정진석 의원 우리가, 우리가 GSOMIA 체결에 동의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국무총리 이낙연 동의했던 것은 그 당시의 과정을 잘 아실 겁니다. 박근혜정부 그때……

○정진석 의원 하나지요,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대처방안의 하나로서 우리가 GSOMIA를 체결한 게 가장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을 생각해 보더라도 GSOMIA 논의는 그전부터 있어 왔는데 왜 그 시점에서 GSOMIA를 체결했느냐? 바로 첫 번째 이유는 북핵 위협에 대한 대처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런데 그런 사이인 한국을 향해서 일본이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지목을 했으니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분들에게 ‘군사정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칠 수는……

○정진석 의원 알겠습니다.

어저께 워싱턴에서는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미일 정상회담이. 거기서는 GSOMIA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고 GSOMIA의 복귀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되었는데 GSOMIA가 실행되는 것, GSOMIA 종료의 실행에 옮겨지는 시점이 11월 22일인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3일.

○정진석 의원 23일인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정진석 의원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 정부가 GSOMIA의 복귀를 위해서 어떤 터닝 포인트, 모멘텀을 좀 회복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일본이 취했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들을 철회하면 저희들도 GSOMIA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 외교·안보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정책 현안이 뭐라고 총리님은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국내적으로는 당장 아프리카 돼지……

○정진석 의원 그렇지요? 아프리카돼지열병입니다. 제가 그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5월 달에 최초로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것이 국제기구에 보고가 되었지요? 그렇지요, 총리님?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정진석 의원 그리고 나서 바로 총리께서 기민하게 대응을 하신 것 같습니다. 6월 초에 방역 대책을 마련했고 또 일선 군부대도 방문했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계속 확산 일로에 있지 않습니까? 이 차단방역이 현재로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정진석 의원 그렇습니다, 굉장히 걱정입니다.

지금 이게 중국에서 발생을 해 가지고 동아시아로 번져서 베트남, 몽골, 한국, 북한 다 이렇게 번졌는데 중국은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손실만 170조 원을 썼답니다. 이것 어마어마한 이야기이고.

서울대학교 문정훈 교수님은 이 돼지열병 사태에 대해서 첫마디를 이렇게 했어요, ‘지옥문이 완전히 열린 것이다, 지옥문이’.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정말 엄청난 사태가, 재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과연 우리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차단방역에 효율을 기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의심을 해요.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와서 얘기를 했듯이 북한 전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창궐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북도는 돼지가 씨가 말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연히 감염 경로가 북으로부터 남하해 가지고 우리 접경 지역에 돼지열병이 발병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많은 국민들이 하는데 통일부장관이 지난번 상임위에서는 인정을 안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돼지열병이 북한에서 내려왔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어떻게 통일부장관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것 과학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인데 상임위에서 통일부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으로부터 내려왔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단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총리께서도 같은 생각이신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6월 초, 그러니까 북한이 국제동물기구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을 신고한 직후에 접경 지역의 방역 초소를 돌아다니 이유가 있습니다. 추정이지만 우리 코앞에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방역하자 그러한 취지로 했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아홉 건 모두 접경지대에서 벌어지고 있고 아홉 건 중의 다섯 건이 강화군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아주 비상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오리진(origin)이, 감염경로가 북한으로부터 남하해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국무총리 이낙연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석 의원 예. 통일부장관과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당의 정유섭 의원이 그 지역 출신이신데 지난번 태풍 링링이 왔을 때 시계 방향으로 태풍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웅진반도에서 강화도 북단 쪽으로 쏟아져 내려오니 북쪽에서 많이 쓸려 내려온 거예요. 거기에는 축산 분뇨도 있고 각종 폐기물도 있고 북한에서 흘러 내려온 게 엄청나게 쌓였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부주의 사항을 제가 지적하자면 6월 초에 총리께서 진두지휘해서 지금 이 대책을 세우고 강구를 했는데 6월 30일 날 어떻게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이 다 판문점으로 몰려갈 수 있습니까? 그것 부주의한 거 아니에요? 소독 조치라도 하고 인파가 몰려가야지, 다중이 모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주의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의견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특별한 의견이라기보다는요……

○정진석 의원 부주의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서……

○국무총리 이낙연 지하수를 포함한……

○정진석 의원 서희 얘기를 했는데 총리께 왜 이런……

우리 외교관들, 수많은 천하인재들이 대한민국에 널려 있어요. 제가 GSOMIA 파기 결정됐다는 것을 YTN 자막 보고 바로 전직 고위 외교관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분의 첫 말씀이 ‘김현종이 정의용을 눌렀구먼’ 이게 첫 말씀입니다. 김현종 안보실 차장이 지금 외교부장관하고 막 눈을 부릅뜨고 싸울 정도로 외교적 실세예요.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조언하는 참모 중의 참모이지요. 그런데 김현종 실장의 프로

필을 봤더니 정무외교하고는 거리가 있는 분이네요. 전혀 그런 경험이 없어요. 미국 변호사고 통상전문가예요.

이 중차대한 시점에, 강기정 정무수석의 말을 빌리면 국가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큰 명운이 달린 무슨 회담 이렇게 운운되는데, 후임 외교장관을 임명 제청할 기회가 만일 온다면 그런 경험이 부족한 비전문가를 외교장관에 천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이낙연 그럴 기회가 언제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현안에 경험이 있는 분이 중책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석 의원 총리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정진석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정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파주시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을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저는 오늘 한반도 평화가 대한민국 향후 백 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할까 합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오늘 주제에 앞서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인천 강화군에서 추가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파주를 비롯해서 총 아홉 군데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경우 돼지 1억 5000만 두가 살처분됐고 돼지고기 가격은 2배로 폭등하는 등 손실이 1조 위안, 우리 돈 17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총리님,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의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주변지역에 차단벨트를 만들고 차단벨트 내 농가의 돼지들을 미리 도축하여서 유통시키거나 냉동·냉장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돼지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좋은 의견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농가의 동의가 없이는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고려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주신 이것을 저희가 연구과제로 알고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박정 의원 산불 진화에도 맞불이라는 작전이 있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의 우려가 정말 많습니다. 확산 방지와 피해 수습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고 국비 지원도 요청한 바 있는데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정 의원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9월 25일 제9차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두 가지 점에서 높게 평가합니다. 백악관이 한미 정상은 린치핀(linchpin), 다시 말해서 핵심축으로서의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는 한편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발표할 정도로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미 동맹의 균열 혹은 약화 등을 거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가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성공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총리님, 이번 9차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연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시기적으로 북·미 간의 3차 정상회담과 그것을 위한 실무접촉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도 기

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지는 아직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북·미 양측의 정상 모두 연내라는 시점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고 그것을 위한 이번 실무접촉에 양측 모두 매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미 3차 정상회담의 성공을 어렵잖이 기대하고요. 기왕이면 그것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 의원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북대화 재개도 중요합니다.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릴 월드컵 예선이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10월 1일 중국 건국 70주년 행사나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에 참석하면서 다자외교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김정은 위원장이 다자외교에 나선다면 11월 방한을 적극 추진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마도 북·미 정상회담 또는 북·미 실무접촉에서의 어떤 진전이 있을지 하는 것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미 간의 접촉 그전 또는 그 중간쯤에 방중의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런 일련의 과정이 혹시 있을지 모를 김정은 위원장의 부산 방문의 가능성을 높여 주기를 기대합니다만 아직으로서는 이렇다 할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정 의원 지난 9월 24일, 25일 제11차 SMA, 즉 한미 방위비 분담금 1차 협상을 했습니다. 이 협상에서 미국은 지난번처럼 작전지원 항목 추가를 원하며 20억에서 50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1차 회의에서 미국의 기대와 원칙을 밝혔다고 하는데 보고받으신 바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얼핏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넘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 의원 총리님, SMA 취지와 목적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입니다. 따라서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 등은 SMA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을 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약속하실 수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말씀 주신 대로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SMA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미 미국 측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입장을 견지할 것입니다.

○**박정 의원**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제10차 협정 당시에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여섯 가지를 잘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 의원** 장관님, 그런데 현재까지 국회 부대의견 중에서 이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총액형이 아닌 소요형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실무단은 단 두 차례 회의만 했고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방부가 국회 부대의견만 충실히 이행해도 제11차 SMA 협상을 잘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부대의견을 조속히 실행할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제11차 협상에서 국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저희도 이 제도개선과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액형이나 소요형이나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총액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방위비 분담금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유리하고 소요형은 운영의 투명성은 높일 수 있지만 액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국회에서 부대의견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개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정 의원** 미국 측에서 20억에서 50억을 얘기했기 때문에 소요형의 예산 형태가 더 적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을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제10차 SMA 제5조에는 ‘당사자의 관계당국은 주한미군사령부 소속 한국인 노동자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감원 스케줄 중의 하나입니다. 이

감원 계획에 따르면 올해만 168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더욱 큰 문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한미군이 식당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를 해고하고 하청화할 계획이 있다는 점입니다.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정 의원** 제10차 협정에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비 지원도 대폭 인상해 줬고 인권비 부담률도 88%로 상향했는데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해고되는 현실에 대해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들은 정말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들도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들의 고용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를 위해서 제11차 SMA 협상 TF에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방안과 SOFA 노무분과위원회 등에서 해고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주한미군사령부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의원** 감사합니다.

일본 수출규제와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은 적절했지만 산업계에서는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총리님, 총리님께서서는 지난 8월 백색국가와 GSOMIA 맞트레이드를 얘기한 적 있으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맞트레이드라기보다는 일본이 취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면 한국도 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다.

○**박정 의원**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계속하실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 전제처럼 되어 있는 강제징용 문제는 양국 외교부 사이에서 그리고 수출 문제는 양국 산업부 사이에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속도가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실무협 의에 속도가 나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 의원** 잠시 화면을 보시지요.

아직 돌려받지 못한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의

우편저금통장입니다.

총리님, 사할린 강제동원 우편저금 문제를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정 의원 1991년 2월 일본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나이 순지 외무성 조약국장이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기초하는 처리는 사할린 분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바 있는데 일본 전문가로서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정 의원 또 1998년 3월 일본 제142회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센고쿠 요시토 의원의 사할린 한국인 미불 우편예금 현황 질문에 대해서 우정성 저금국은 1997년 3월 말 현재 우편저금 59만 계좌에 액면 1억 8700만 엔, 간이생명보험 22만 건에 7000만 엔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를 2018년 물가가치로 환산해 보면 약 7조 4000억 원에 달합니다.

총리님, 그러나 사할린 강제동원 한국인들은 개인 명부 자료가 없어서 7조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1994년 대만 출신 노동자들의 미지급 채무액의 120배 환급을 실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까운 것이 우리 정부가 사할린 강제동원 노동자 명부 사료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총리님, 국내 여기저기 흩어진 자료 정리에 정부가 나서 주셔야 되고 또한 정부 차원에서 일본과 러시아 등에 사할린 강제동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다만 일본과 러시아 모두 저희들이 원부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서 2010년에 그런 원부가 없다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우리 정부 내에 그것을 전담하는 곳을 만들고 동시에 일본과 러시아와의 협의를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 의원 국내 자료부터 모아 주시면 그에 반해서 증거를 보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국내에도 국회에 그 관련법이 아마 제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속히 처리해 주시면 이 활동이 더욱 더 힘을 받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박정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

사에서 평화경제를 얘기했습니다. 총리님, 정부가 생각하는 평화경제의 개념과 실현 방안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평화가 꼭 완전한 평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평화의 기류만으로도 경제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양측의 경제협력이 평화를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것이 평화경제의 개념입니다마는 실제로 의원님 지역구에서 가까운 강화도 교동시장을 제가 두 번 갔었는데요, 정말로 작은 곳이지만 평화경제를 저는 실감했습니다.

첫 번째 갔을 때와 두 번째 갔을 때 거기 찾아오는 방문객, 관광객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주차장을 몇 배로 늘려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부산하게 오고 가고, 거기에 새롭게 문을 연 가게도 늘어나고 하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평화경제의 작은 증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물론 그 대전제는 북한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추진해 가면서 평화경제의 실현을 작은 범위에서부터라도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집입니다.

○박정 의원 맞습니다.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또 평화경제는 평화경제대로 이 두 가지를 맞물려서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평화경제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평화경제특구 추진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통일경제특구법은 17대부터 꾸준히 발의됐고 20대에서는 여야가 동수로 발의한 법으로 특정이념의 전유물이 아닌 한반도 발전 보통법입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통일대박론을 근거로 이 법이 추진되었지만 당시 북한의 핵실험 등 대외여건 악화로 통과되지 못한 안타까운 법입니다. 20대에도 명칭도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통일경제특구법에서 평화경제특구법으로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평화경제특구를 통한 경제적 기대효과는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총리님, 이번 정기국회에서 평화경제특구법이 꼭 통과되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이 법의 입법을 위해서 정부도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정 의원 고맙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 비무장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장관님, 문재인 대통령의 DMZ 국제평화지대 제안에 대해서 통일부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정부는 9·19 남북공동선언 이후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구상을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 유엔 연설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개성과 DMZ의 일종의 국제평화협력지대가 평화경제특구와 잘 어울린다면 광역 차원에서 충분히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 의원** 맞습니다.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추진하고 남측 접경지역인 파주·연천·철원·고성·김포 등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면 평화경제의 구체적 상이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 의원** 하여간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통일부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통일부장관 김연철** 저희들이 신경계 구상에서 남북 접경 협력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화경제특구와 같이 산업협력 방안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식의 구상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 의원** 그런데 장관님, 대통령께서 올해 8·15 경축사를 통해서 남과 북 사이에 끊긴 철도와 도로를 잇는 교량국가론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론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대북 제재에 막혀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변국들은 5G 시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예로 며칠 전에 북한이 제3국에서 일본과 접촉하면서 평양-원산 간 신칸센을 놔 달라는 제안을 했다는 뉴스를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몽골에서의 북한과 일본 사이에는 크게 책임 있는 발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북철도 연결 분야는 2018년에 1차적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가 정밀조사와 또 설계를, 절차를 남겨 두고 있고요.

철도 연결은 비상업적 공공 인프라에 해당됩니

다. 제재결의안에 보면 비상업적 공공 인프라는 제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인 조치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작업까지 마쳐서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을 할 때는 당연히 이런 절차들을 밟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북핵 협상을 비롯한 국제환경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 의원**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이 철도의 연결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박정 의원** 그래서 대북 제재에 대해서 너무 미리 겁먹지 말고 우리의 정부가 다른 나라, 중국이나 일본이 하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철도 연결은 남북관계의 역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논의해 왔던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량국가에서의 핵심적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국제적으로도 매우 관심이 높고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이 철도 연결 사업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유념하면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전 세계의, 4만 5000km 중에서 고속철을 3만km 났습니다. 이 경험이 있는 것과 또 최소 비용으로 깔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자꾸 북한에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철도주권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특히나 이 경의선의 연결은 북한이 중국과의 교역을 90%나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라 이런 것들이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해법을 제시할 때 충분히 내세울 만한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장관님, 정말로 북·미 대화의 재개만 바라볼 게 아니고 정말 대북 제재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 통일부에서 선제적으로 하셔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진행될 때 평화경제가 정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 김연철** 이번 유엔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현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대 원칙을 밝혔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전쟁 불용이고 두 번째는 상호 안전 보장이고 세 번째가 공동 번영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은 우리가 가장 중심으로 추진하는 과제이기도 하고 그것이 남북관계 발전뿐만 아니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환경을 조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 의원 한 가지 더, 지금 북한이 제재가 풀리고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경제 발전이 일어날 때 필연적 과정으로 1차서부터 4차 산업까지를 다 발전시킬 텐데 그중에서도 2차 산업을 발전시킬 때, 우리가 중공업보다는 경공업 중심으로 할 거고 그럴 때는 북한의 지금 상황상 경유나 높은, 석탄을 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에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환경오염이 우리 한반도에 큰 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는데 이것까지 고려해서 우리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추진하는 러시아로부터 북한을 거친 한국까지의 가스 연결, PNG에 대한 연결을 통해서 그쪽의 환경오염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가 있고, 이 가스는 결국은 무기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 김연철 지금 DMZ의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또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원칙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차원의 환경협력뿐만 아니고 유엔의 환경 관련된 기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정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 평화는 이제 우리가 한 번도 가 보지 못한 길이고 향후 100년을 보면서 가야 할 길입니다.

평화는 스스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내야 합니다.

서로에게 겨누 총과 칼을 내려놓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100년을 위해 우리부터 이곳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박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미추홀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윤상

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의원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미추홀구를 출신의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외교부차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차관님,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제산법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새로운 방법, 일치하는 게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아직은 서로 간에 협상도 시작되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윤상현 의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이라는 게 결국 북한이 계속 주장해 온 제재 해제, 경제 지원 또 체제 안전 보장에다가 부분적 비핵화를 동시에 병행하자는 단계적 비핵화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최종적인 상태로서 완전한 비핵화, 그것이 전제된 후에 동시적 또는 병행적으로 이행돼야 된다는 그런 기본 원칙 속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방법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선 비핵화, 후 보상이라는 볼턴 보좌관이 사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제재 해제를 요구할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먼저 북측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제재 해제의 요건이 뭐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먼저 의미 있는 조치들이 북측으로부터 좀 있어야……

○윤상현 의원 어떤 게 의미 있는 조치입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비핵화에 대해서 진전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조치들이……

○윤상현 의원 예를 들어서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영변 핵 폐기 정도면 됩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영변 핵 폐기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윤상현 의원 맞습니다.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영변 핵 시설 플러스 다른 여러 가지 핵 시설의 폐기가 전제돼야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차관님 말씀 동의하시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최종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가 필요하고 영변 시설의 폐기는 그것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것만으로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윤상현 의원** 제재 해제가 북·미 간의 협상의 의제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제재 해제는 북측이 중점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북·미 실무협상이 개시된다면 그 속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최근에 외교부 고위 관리가 북한이 제재 해제보다는 체제 안전 보장 쪽으로 방점이 바뀌고 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나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2월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에 북측이 안전 보장 문제를 강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제재 해제 요구에서부터 체제 안전 보장으로 방점을 옮긴 게 아니라 제재, 요구에다가 덧붙여서, 첨가해서 체제 안전 보장 요구를 다 같이, 더 큰 요구를 한 거다. 오히려 판을 키운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차관님?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북한의 입장에서는 안전 보장도 중요하지만 또 제재 완화도 포기할 수 없다 아마 그런 뜻일 걸로 생각됩니다.

○**윤상현 의원** 최근에 보면 정세가 북한에게 호의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내부적으로 미사일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때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더 큰 요구, 더 크게 판을 키워서 임하겠다는 게 북측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북측에서 판을 더 키워서 많은 요구를 한다면 아마도 그에 상응하는, 비핵화의 측면에서도 더 과감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가까운 그런 행동을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

요구, 무슨 내용입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아직까지는 북측으로부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이다라는 설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그것은 한마디로 선명한 요구입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전력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말할 것도 없고 주일미군의, 일본에 있는 미군의 전력을 전부 후퇴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북한은 이번에 판을 키워서, 체제 안전 보장 요구까지 더해져서 판을 키운 다음에 북한이 협상에서 뭔가 양보하듯이 하면서, 비핵화, 영변 쇼를 하면서 협상에 임하겠다는 이것은 트럼프에 맞춰진 협상 전술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미 동맹, 돈 안 되는 동맹이다’ ‘연합훈련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트럼프를 겨냥한 협상전략이다, 그래서 아마도 북·미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내지 철수가 의제로 오를 것이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그것은 북·미 간의 협상이 시작돼 봐야 하겠지만 주한미군의 문제는 북·미 간의 그런 협상과는 별개로 한미 동맹에 관한 사안이고 또 그 문제는 한미 간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 주한미군 철수,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그 문제는 동맹 사안이고 한미 간에 합의해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 감축, 어떤 입장이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그 문제에 대해서도 미 측하고 협의……

○**윤상현 의원** 제가 만나 본 미국의 조야 정치인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을 감축하더라도 전혀 놀랄 게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그러한 의견들이 일부에서 있는 것으로는 듣고 있습니다만 한미 간에는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견의 차이가 없습니다.

○**윤상현 의원** 이번에 북한이 실무협상에서 미국과 타협점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희망으로서는 조속한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돼서 거기서 북한도 타협점을 찾는 노력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저는 그렇게 타협을 보지 않을



거다, 왜냐? 체제 안전보장 요구라는 게 결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을 축소시키려는 중국의 전략을 가장 앞서서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거든요. 결국 김정은이 시진핑의 돌격대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시진핑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지금 얻어 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체제 완화효과 같은 것을 발생시키고 있고요. 결국 김정은은 중국이라는 뒷배를 믿고 체제 해제 요구에다가 체제 보장 안전에 대한 요구, 결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군의 전력을 축소시키려는 이런 협상에 임할 거다, 미국이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아태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북한이 원하는 대로만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 차관님, 김정은의 최종 목표가 비핵화입니까, 아니면 핵보유국 지위 인정입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그것을 의도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남·북·미 정상들이 모두 각각의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그러면 차관님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믿는다고보다는 그러한 의지를 분명히 표명을 대외적으로 했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 근거가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그것은 남·북·미 정상들 간에 그런 완전한 비핵화의……

○윤상현 의원 제가 이번에 만나 본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 아무도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비핵화 의지?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에 차관님이 김정은이라면 체제 해제시키고 핵보유국 지위를 얻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우리 입장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상현 의원 우리 차관님께서서는 CVID만 견지가 된다면 스톱딜이라도 괜찮다 그런 입장이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방법론은 여러 가지로 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종 목표로서 중요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다 이렇게 강

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윤상현 의원 정부 측은 스톱딜이라도 해서 결국 체제 해제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해 가지고 남북관계 발전시키면 비핵화를 선순환한다, 이 주장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그렇지만 최종 상태로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윤상현 의원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을 위해서 단계적인 비핵화 스톱딜 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미국 입장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우리와 일치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타협할 거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윤상현 의원 북·미가 이런 식의 협상에 임하려면 적어도 기초적인 세 가지에 동의를 해야 된다, 저의 입장입니다. 그것은 뭐냐? 북한의 비핵화가 무얼 의미하는지 정확한 개념 정의가 있어야 되고요, 북핵 시설에 대한 신고 방안이 있어야 되고 북한이 비핵화를 언제까지 마치겠다는 비핵화 로드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다, 여론이나 국민한테 제시를 못 하면 비핵화,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안 됩니다. 체제 해제 요구, 없습니다. 결국 북핵 보유국의 왕초가 되는 김정은이 이런 세 가지 요구조건을 받아들이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상태 그리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로드맵에 대해서 한미 간에는 긴밀한 협의와 공감대가 있고 그것을 반영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 차관님, 제가 이번에 만나 본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인사들 모두가 하나같이 북한의 김정은 그 측근으로부터 비핵화 로드맵은커녕 북한의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조차에 대해서도 설명 듣거나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그렇기 때문에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조기에 재개돼서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윤상현 의원 그런데 차관님, 실무협상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

화, 작년 4월 27일 아닙니까? 지금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세상에, 남북한·미국 정상들이 그렇게 수차례 만나고 장관급들이 그렇게 만나고 그리고 실무협상을 그렇게 했는데 북한의 비핵화가 뭔지 개념조차도 확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한다고 합니까? ‘그것은 존엄한테 물어봐라. 난 책임 못 진다’ 세상에, 어디에 이런 협상이 있습니까, 차관님?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밝힌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대화 등을 거듭하면서 그러한 목표에 다가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 김정은 비핵화 의지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차관님,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사기,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극입니다. 결국 비핵화 프로세스, 단 1%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현재까지 진전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표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 의원 차관님, 지금까지요 1년 5개월 동안 진전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년 5월 말 인가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입구 폭파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뭐 했습니까? 미사일 전력 대폭 증강했지요, 그리고 핵무기 12개를 만들 핵물질을 추출해 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비핵화입니까? 잘못된 거지요.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사기극입니다. 결국 이번 한미 정상회담……

만약에 외교부차관이, 장관님입니까, 대통령께 무슨 건의를 드려야 되느냐? 이번에 한미 정상 만나면 북한의 비핵화가 뭘 의미하는지 두 분 대통령이 정확한 개념 정의를 하고 전략을 공유하고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를 해야 된다, 그게 알맹이가 있는 정상회담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GSOMIA 얘기도 없어요. 이게 무슨 한미 동맹입니까?

결국 한국이나 미국이나 자기실현적 예언에 빠져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될 거라는, 김정은의 선의를 믿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 결국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차관님, 제가 차관님 참 존경합니다만 차관님

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청와대 관계자들, 장관님께 꼭 말씀하셔서 이것을 빨리 정정하셔야 됩니다.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외교부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만약에 트럼프가 새로운 방법을 해서 또 안 됩니다. 장기 교착상태에 빠지지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됩니다.

우리의 옵션이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그러한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 그런 사태에 이를 것 같습니다, 차관님.

핵무장 반대하시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그렇습니다.

○윤상현 의원 왜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우리가 이미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가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 전술핵무기 재배치?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 의원 이유가 뭡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저희들이 북한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없습……

○윤상현 의원 그렇지요.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북한·중국·러시아가 반대하고 중북좌파들이 반대하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B61 갖다 놔도 1분 30초면 러시아산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폭파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북한의 핵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을 조기에 완결 짓도록 노력……

○윤상현 의원 그것은 안 되고요 힘듭니다. 결국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도 한반도 비핵화 지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한반도 영해 바깥에다가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자,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뉴클리어 셰어링, 핵 공유 협정을 맺자, 제가 줄기차게 몇 년 전부터 주장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확장억제의 유효성

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끊임없는 협의를 통해서 그것이 유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우리가 요격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요격 능력이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미국 정보 당국은 힘들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신뢰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 제시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뭐 힘들다라고 하는 그 근거나 이유가 뭔지 저희하고 정확하게 공유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장관님, ‘할 수 있다’는 것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한반도 전투 중심이 짧고요.

그리고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에 대해서 요격 실험한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실사격은 안 했지만 그런 성능이나 능력을 시뮬레이션으로 지속적으로 하면서 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그 미사일에다가 전술핵 탑재할 수 있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한미 정보 당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탑재 가능성은 확인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북한군의 전력이 구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최신행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바뀌는 상태에 있다,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지금 계속해서 미사일 시험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북한이 북·중 국경에 배치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게 일본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습니까?

이것을 북극성-2형이라고 이야기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북극성-2형은 북극성-1형, 원래 SLBM 용으로 했던 것을……

○**윤상현 의원** 지상용으로 개량한 거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지상용으로 성능 업그레이드 한 것이고, 그것이 거리는 조금 짧습니다. 한 1300km 정도로 지금 현재까지는……

○**윤상현 의원** 중거리 미사일이네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것을 준중거리라고 표현하고,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화성-12형이나 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무수단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북한이 이 전략무기를 김정은이 ‘대량 생산해 배치해라’ 한 지가 벌써 2년 반 전입니다.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몇 기 정도 배치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지금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배치한 것은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누누이 또 우리 국민들께 설명드렸지만 전체적으로는 대략 한 800여 기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로 이렇게 있고 거리가 많이 나가는 것은 소량으로 하고, 현재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양산단계, 배치단계는 아직 가지 않았다 이렇게 저희가 동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북한의 모라토리움, 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험이나 핵실험 중단하겠다는, 저는 하나의 속임수로 봅니다. 북한은 핵실험 할 필요가 없고 장거리 미사일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이용하는 것, 결국 이게 북한군이 나가는 전략 방향이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이나 또 SLBM 미사일을 개발하고 하는 것 자체는 어찌 됐든지 간에 북한이 추구하고자 하는 미사일 다중화, 다양화 이런 전략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SLBM 탑재 잠수함이 언제쯤 진수가 될 예정입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제가 그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움직임, 동향은 저희가 매일매일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저는 SLBM 탑재 잠수함이 태평양으로 나가면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제공한 핵우산 이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 본토도 위협에 빠질 수 있고, 이러면 동맹에 위기가 올 것이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하나의 어떤 위협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동맹 미국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산은 훨씬 더 크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 장관님, 그것 한번 저를 설득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정경두**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아까 다른 의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평소에 징후를 감시할 수 있는 정찰·정보·감시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가령 예를 들면 곧 들어올 고고도 UAV라든지 또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중고도 UAV라든지 또 정찰위성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여튼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탐지수단만 보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2대, 이지스 구축함 3대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다양한 능력에 부족하다고 보고 이미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2대 추가 그리고 이지스 구축함 3척을 추가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지휘 통제해서 모든 자료를 통합하고 융합하고 바로바로 요격명령을 내리든지 또 공격명령을 내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지휘통제 시스템도 지금 현재 KTMO CELL 주·예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런 어떤 요격체계에 있어서도 현재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에 추가해서 M-SAM 성능 업그레이드한 Block-II 그다음에 L-SAM 개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능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함에 탑재할 수 있는 탄도탄 요격능력도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SLBM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해상초계기사업 그다음에 해상작전헬기사업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능력 보강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 국방비의 수준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열심히 하는 것하고 잘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북한군의 작전계획은 기습입니다.

6·25 남침, 천안함 폭침, 연평도 공격, 지금 말씀하신 SLBM 이것도 기습 공격하기 위한 건데, 우리 대잠능력 일본보다 우위입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바다 수역이 넓고 길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현재 우리 한반도의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해·서해·남해 여기에서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능력들은 우리가 다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사업을 진척시키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대부분의 작전은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대잠작전에서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동해와 태평양으로 나가는 북한군의 잠수작전을 차단할 수 있는 한일 군사협력을 극도로 비난하고 그 연결고리인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폐기하라고 극도로 선동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의 대잠능력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우리도 대잠능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209급 잠수함, 214급 잠수함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해상초계기 P-3 그것도 현재 우리가 16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작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해상작전헬기도 현재 가지고 있는 링스 헬기 그리고 AW159에 추가해서 또 더 보완하기 위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그런데 문제인 정부 청와대가 일본의 경제보복 빌미로 해서 이것하고 상관없는 GSOMIA를 폐기하고 북한의 요구를 들어줬어요. 한일 간의 군사협력을 증강시켜야 되는데 한일 간의 군사협력을 오히려 쇠퇴시켜요. 이게 자살행위 아닙니까?

장관님께서도 GSOMIA의 전략적 중요성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장관님께서 이런 부당한 지시에 맞서서 뭔가 항변하신 적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GSOMIA의 정부 결정 당시에는 정부 전 부처, 심의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들이 심도 깊게 정말 많은 부분들을 논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미칠 수 있는 영향요소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GSOMIA 폐기를 반대하셨지요, 장관님?

○**국방부장관 정경두** 반대이고 찬성이고 그런 걸 떠나 가지고 정부가 결정을 하기 전에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한미 간의 연합 군사훈련 전면 폐지에 대한 입장은 뭐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정경두** 전면 폐지를 할 수가 없다고 보고요. 만일에 전면 폐지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하신 북한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어떤 비핵화와 관련된 상응조치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어떠한 결정이 이루어지든지 간에 우리 한미 국방·군사 당국에서는 그런 어떤 연합방위태세나 능력이나 우리의 작전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보완대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돈 낭비다, 불필요하다. 청와대, 전면 폐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입장이 없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실무협상에서 그것 들고 나오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장관님, 그때는 직을 걸고 막으실 작정이십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나 미 측 주요 인사들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밑의 참모들이 그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는 데 대해서 그걸 막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8월 달에 우리가 연습을 정상적으로 다 이행을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신을 끝까지 지켜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북한의 체제 안전을 왜 미국이 보장해 줘야 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깊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6·25 전쟁 때 교전 상대였고 또 정전 상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협의의 대상이었고요,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바로 이 체제 안전 문제가 북·미 정상회

담 합의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미국이 북한을 먼저 침공한 적 있나요?

○**국무총리 이낙연** 북한은……

○**윤상현 의원** 오히려 북한이 우리를 치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체제 안전, 결국 북한 주민이 결정할 문제 아닙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이낙연** 예, 옳은 말씀이신데요.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6·25 때를 생각하면 미국을 떠올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 인질범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 결국 인질범의 인질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겁니다. 북한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서서 북한을 대변해 주고, 북한 주민들도 원하지 않는 체제 안전 보장을 해 주고 경제 지원을 해 주고, 결국 우리 국민의 재산을 담보로 우리 국민을 인질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현실적으로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미국과 북한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윤 의원님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윤상현 의원** 총리님, 진보 정치는 안보가 강력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그 뜻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현 상황은 아무리 봐도 진보에 대한 배신 같아 보입니다. 총리님께서 정부 부처를 관찰하시다 보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어떤 관점을 하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상현 의원** 정치가 외교를 없애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와대가 국방부 또 외교부를 그냥 허수아비로 세워 놓는 것……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진보와 안보와의 관계를 말씀 주셨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아마도 과거 어느 정부에 못지않게 국방비를 많이 증액하고 있고 국방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실 겁니다.

○**윤상현 의원** 아니 총리님, 현재 외교·안보 정책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총리님,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것 그것은 진보에 대한 배신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법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가 곧 판가름이 날 거라고 봅니다. 아직은

단정하기에는 빠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법에 관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법 이외의 문제에 관해서는 본인도 여러 번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현재 법무부장관의 임명에 대한 청와대 태도를 보면 이것은 혁명을 한 우리끼리의 문제다, 정권을 가진 우리끼리의 문제니 국민은 상관하지 말라 이런 태도입니다. 이게 혁명에 대한 배신, 진보에 대한 배신 아닙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이낙연** 대통령께서도 이번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아주 무겁게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고뇌 끝에 임명을 결정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총리님,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의 실패 사례인 불통을 더 이상 따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총리님께서 법무부장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정말로 속 터지는 우리 국민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해야 한다. 깊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윤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윤상현 의원**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1980년대에서 온 사람들 같습니다. 1980년대 이념의 잣대로 2019년 대한민국을 가르고 쪼개서 정말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나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인사도 끼리끼리 나눠 먹고 여론도 끼리끼리 조작합니다. 국정도 끼리끼리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남북 정권, 끼리끼리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잔치고 그들만의 정권이고 그들만의 끼리끼리 정권입니다.

진보정치, 바라지 않습니다. 탐욕의 정치, 그것만이라도 멈춰 주십시오. 그것이 국민들의 지상 명령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윤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금천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금천구 출신 이훈 의원입니다.

미중 패권경쟁이라고까지 불리울 정도로 미국과 중국 간에 새로운 전략적 균형을 찾아가려는 지난한 과정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지형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고민과 숙제를 던져 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또 다른 한편으로 세계는 무역자유화를 확산시키고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다자무역 체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자국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무역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근의 미중 무역 갈등이나 일본의 수출규제가 그 한 단면을 보여 준다 할 것입니다.

숙명적으로 개방적 통상국가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아가 사드 문제에서 보았듯이 우리에게 안보와 경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그리고 지정학적 운명에 따라 동전의 양면처럼 얽혀 있다 할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에 북한 비핵화를 향한 남·북·미 간의 의견 조율 그리고 일본의 수출규제에서 비롯된 한일 갈등에 대한 조정, 전쟁 없는 한반도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남북 간의 협력 문제까지 닦쳐 있는 숙제와 과제가 어느 하나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비상한 각오와 결단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적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실무회담이 임박한 시기에 한미 간의 정상이 만나서 이번 북·미 실무회담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의견을 나눴다는 점 그리고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는 점 등등이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닦쳐올 수 있는 지역 내의 도전에 협력하며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훈 의원** 저의 짧은 식견으로 보더라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 그리고 70년이나 묵은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계 구축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것이 참 주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한 것도 큰 성과로 보입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외교부차관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차관님, 아마 우리 국민은 북한 비핵화라는 커다란 안보적 현안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핵심 고리로서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데 북·미 간의 정상회담은 언제쯤 재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가급적 빨리 재개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앞 단계인 북·미 실무협상도 아직 날짜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훈 의원 우리 국민은 연내에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바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미 협상을 사실은, 실무협상을 해 봐야 알겠지만 분위기로 봤을 때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양국 정상은 싱가포르 합의의 정신이 계속 유효하다 하는 점도 재확인을 했고 또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실무협상과 그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데 대해서 공감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실무협상이 재개되기만 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 봅니다.

○이훈 의원 또 일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미 두 정상께서 조기에 북·미 실무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좀 도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정상회담에서의 내용 자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말씀 올린 대로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서 그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화가 시작이 된다면 북한의 비핵화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안전보장 문제, 한반도의 평화 문제들을 모두 다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그런 자세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룬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훈 의원 일부 전문가라는 분들의 말씀을 좀 따르면 미국의 북핵 해결 프로세스에 대해서 과거 리비아식 해법보다는 좀 새로운 해법을 모색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한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러한 새로운 해법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새로운 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북·미 실무회담이 재개가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해 보자는 그런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이훈 의원 일부에서 우려하는 단계적 협상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까, 혹시?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단계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전제되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최종 상태에 대한 합의 그것이 전제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훈 의원 단계적 접근이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목표가 합의되고 또 그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훈 의원 그런 우려를 하시는 야당 의원님들 많으신 것 아시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의원 저는 정부가 좀 더 나서서 충분한 설명과 설득 작업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접근 방법에 대한…… 야당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도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의원 한미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 전환을 위해 70년 가까이 되는 적대관계를 끝내고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대북 무력 불사용을 거듭 약속한 바 있는데 이게 비핵화 협상 진전에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그러한 점을 북측도 잘 인식을 해서 속히 북·미 실무협상 그리고 한국과의 남북관계 발전에도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훈 의원 또한 우리 대통령께서는 유엔 연설

에서,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반도 문제를 푸는 원칙으로 전쟁을 불용하고 그다음에 상호간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공동 번영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말씀이 북한 비핵화가 북한을 고립으로 이끌거나 내지는 북한 체제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의 공동 번영의 길임을 좀 증명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요. 북측에서 바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측면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훈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북핵 문제 해결의 초석을 놓고 그리고 실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고 진지하게 임하게 하는 촉진제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리님,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 북·미 간의 실무협상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북·미 간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정부도 진정성 있는 노력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시에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좀 여쭙보고 싶습니다.

대북 제재는 유엔 제재 그리고 미국의 독자 제재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자 제재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북 제재 완화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논의를 하기 위한?

○**국무총리 이낙연** 현재는 북한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훈 의원** 저는 북한 비핵화 조치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데 우리가 먼저 제재 완화를 논의하는 것은 안 된다는 우려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려면 북한이 어느 정도 성의 있는 태도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한미 간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제한적 완화를 먼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6월 미국 상원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건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훈 의원** 이 같은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 우리 기업이나 은행은 북한과 거래를 하게 되면 우리 기업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문제가 사실은 막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남북협력의 주요한 지렛대가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일부라도 한미 간의 논의를 통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의 제한적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면 저는 환경이 좀 변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지금이 그 단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번 북·미 간의 실무협상과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결실이 나오는 것이 필요할 거라 봅니다. 당장 저희가 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훈 의원** 저는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 우리 정부의 미국 정부를 향한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사실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훈 의원** 총리님, 제가 오늘 한미 동맹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혹자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 운명이라고까지 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현주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미 동맹은 총리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전협정 그리고 1953년 양국이 서명한 상호방위조약 그리고 경제 및 군사문제에 대한 한미합의의사록 그다음에 1966년 체결된 SOFA라고 하지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통해서 그 제도적 틀이 완성됐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역시 한미상호방위조약일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아시겠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훈 의원** 당시 우리 국민의 1인당 총소득은 불과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 66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 국민 1인당 총소득은 3만 600달러,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경제 12위의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세계는 우리나라를 보고 20세기의 기적이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미 동맹에 있어서 우리 국력이 커져 온 만큼 우리의 책임과 역할도 커져 왔다고 봅니다. 아마 방위비 분담금이 커져 왔던 과정이 그럴 것이고 평시작전권을 이양받은 것이 그럴 것이고 지금에 있어서 전시작전권 이양을 논의하게 된 것도 아마 우리 국력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우리의 책임 있는 역할과 발언, 국력에 걸맞은 기여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 동맹 역시 저는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 역시도 이러한 우리의 입장, 한미 동맹에서의 우리의 역할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역할과 지위 그리고 책임을 수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한미 동맹이 6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늘 똑 똑 같은 관계였던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의 전면적으로 미국의 원조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상태에서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하고 교역을 하는 그런 관계로 변했습니다.

시혜와 수여의 관계에서 상당한 정도까지 대등한 관계로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대등은 아니더라도요. 그런 점에서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한미 동맹이 진화돼 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이훈 의원 그런데 되게 어려운 처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중국하고 특히 경제적 관계로 본다면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홍콩을 포함한 중국과의 교역량은 일본과 미국의 교역량 그 합보다 2배가 넘습니다. 무역 내용 면에서도 작년 대중국 흑자는 9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대미 흑자의 7배에 달합니다. 우리의 막대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국가 이익이 대중국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움직임을 보면 한미 동맹이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관계 속에서, 대중국 관계 속에서의 그 전략경쟁 한가운데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계 질서의 재편 또는 재편 가능성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그것을 현직 총리의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은 66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자 최대의 경제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상대입니다. 또한 북한을 움직여서 비핵화와 평화 정착으로 가는 데 미국이 중심적 역할을 하지만 중국의 건설적 역할 또한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히 지혜롭게 임해 가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훈 의원 제가 외교·안보적 분야에서 식견이 좀 부족해서 그냥 직접적으로 여쭙보고 싶은데……

한미 동맹의 미래가 반중국 동맹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게 양자택일의 관계는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훈 의원 총리님 들어가서도 좋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이훈 의원 외교부차관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한번 물어보신 것인데 제가 좀 확인하고 싶어서 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인데요, 미 측의 요구 수준이 SOFA 협정을 개정할 수준입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미 측이 요구하는 내용 중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기존 틀로서는 포괄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방위비 협상 틀 속에는 수용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이훈 의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실은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저는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비용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한미 동맹의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그만큼 우리의 책임과 역할도 커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의 균형을 어떻게 찾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상을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앞으로 전개될 방위비 분담 협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지금 바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유념해서 대처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의원 차관님,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리도

일본처럼 토지사용료도 분담금으로 계상을 좀 하고 매년 쓰다 남은 분담금 반환 문제도 개별 항목별로 심사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저희도 이미 미국하고 과거 협상 과정에서 총액형을 소요형으로 바꾸는 문제도 제기한 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다 유리하고 우리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논점들을 미국하고 협상을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의원** 방금 말씀하신 그 소요형에 대한 문제는 아주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저는 우리 국민도 설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이미 지난번에도 제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의원** 차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죄송합니다. 한번 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GSOMIA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인 GSOMIA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GSOMIA 종료를 선언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아서 수출규제를 취하다가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지목하면서 수출 우대국, 즉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해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즉 상대가 우리를 안보상 믿을 수 없다고 지목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나라에게 ‘군사정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국익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GSOMIA 종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훈 의원** 한일 간에 맺어진 협정이었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훈 의원** 그 한 당사국인 우리가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일 양국 말고 중국은 그와 관련해서 환영을 표하고 있고 미국은 그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미국과 중국이 각기의 입장에서

에서 생각하는 전략적 구상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의 반영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이훈 의원** 제가 이것 몰라서 하는데, 혹시 TISA라고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TISA 있습니다.

○**이훈 의원**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이라고 있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훈 의원** 그 내용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약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원활하고 효율적인 가동이 저는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그것으로 아까 야당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유독 GSOMIA를 강조하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종료 결정을 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미국을 어렵게 하며 한미 동맹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TISA가 GSOMIA보다 먼저 있었던 한미일 3국 간의 군사정보공유약정입니다. 그 TISA에 의해서 우리는 한일 간에도 미국을 매개로 해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GSOMIA는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끝자락에 아주 무리하게, 투명치 못하게 처리된 협정입니다. GSOMIA가 종료되려면 11월 23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마는 그것이 종료된다는 것은 2016년 11월 이전으로 간다는 뜻일 뿐입니다.

○**이훈 의원** 저는 GSOMIA 종료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점에서 전략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GSOMIA로 대표되는 한미일 안보협력, 한일 간의 협정이지만 한미일 안보협력이 동북아의 집단적 지역안보협력체제를 지향하기보다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 인식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직 총리의 입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이훈 의원** 공식적인 용어이거나 조약이 있는 것은 아닌데 종종 사용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한미일 삼각동맹입니다. 한미 간에는 상호방위조약으로 묶인 분명한 동맹관계가 맞습니다. 미일 간에도 미일안전보장조약으로 묶인 동맹관

계가 맞습니다. 그러면 한일 간에는 동맹관계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한일 간에는 그런 약정상의 동맹관계는 아닙니다. 단지 말씀 주신 대로 한일 또는 미일 간의 동맹으로 엮여져 있는 협력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훈 의원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상호 협력하는 상당히 모호하고 그런 관계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우리에게 대해서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일 간의 안보협력, 나아가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에 있어서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좀 내야 될 때 같습니다. 우리의 전략적 이익,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한미 동맹은, 나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역내 균형을 해치거나 동북아 지역 전체의 안보협력 노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한미일 군사협력보다 안보협력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무장화에 대처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북 억제용의 기능이 강했습니다. 그러한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고 한국의 대외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그것 때문에 우리 대외 정책이 균형을 잃거나 그러한 일은 없도록 지혜롭게 펼쳐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훈 의원 총리님 말씀마따나 지혜로운 해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한미 동맹, 나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은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에 동원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정부의 각오도 필요하고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이훈 의원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여쭙보겠습니다.

저는 모병제 관련해서 좀 여쭙고려고 합니다.

군 병력 50만 명 시대가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57만 9000명인 상시병력을 2022년 말 기준으로 50만 명으로 감축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이훈 의원 그런데 인구통계를 고려해 보면 이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장관님, 작년 35만 명 수준이었던 병역의무자가 2025년에는 얼마나 감소할지, 혹시 예상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지금 한 2023년 정도 이후에는 대략 연간 입대할 수 있는 자원이 22만에서 한 25만 정도로 줄어드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훈 의원 2023년 이후부터는 거기서 연평균 2만 내지 3만 명씩 현역 자원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 병력 50만 명 유지 가능합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병력구조 자체를 좀 많이 개선·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부 정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군 인력 활용 그다음에 또 대체·전환복무를 좀 축소시켜 가지고 전환시키는 것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훈 의원 제가 시간을 못 맞춰서 마지막 몇 가지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17년에 발간된 ‘한국군 병역 제도의 모병제로의 전환 가능성 연구’라는 논문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의원 그 내용에 보면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가로 투입해야 될 예산과 관련해서 면밀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계산상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조금 전에, 대략 한 2023년 이후에 병력이 많이 줄어들지만 지금 현재 우리 인구의 급감 현상을 보면 한 2030년대 중반 정도에 또 인구 급감 현상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제도들을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거기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병제와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여기서 확정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의원 면밀하게 검토가 지금부터라도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정경두 감사합니다.

○이훈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념의 충돌이자 구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륙세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세력 간의 충돌과 갈등으로 분단과 전쟁이라는 뼈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지금 두 번 다시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각오와 배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주승용 이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진해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찬 의원 자유한국당 소속 경남 진해 출신 김성찬입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께서 조국 전 수석을 장관으로 제청하셨다 하셨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성찬 의원 지금 상황이라도 제청했을까요?

○국무총리 이낙연 지금 상황이라도 최종적인 임명권자와 상의를 했을 것입니다.

○김성찬 의원 아니, 제청을 하셨겠느냐 이거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요.

○김성찬 의원 ‘제청 당시에는 그런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면 제청을 하신 총리께서 책임을 일정 부분 지셔야 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늘 정치적 책임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청은 아마도 초기 후보자로서 천거할 때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때는 이런 일들을 사실은……

○김성찬 의원 그러니까 그때는 모르셨잖아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전혀 몰랐습니다.

○김성찬 의원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총리께서 사람을 잘못 제청하신 거예요.

동의 안 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그때는 이런 것을 전혀 몰랐는데요 만약 그런 단계로 돌아간다면 어찌 됐을지, 가정법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김성찬 의원 이 건에 대해서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용히 수사하라’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찬 의원 지금 압수수색 건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압수수색 받을 때 어느가장이 압수수색하는 검찰 팀장에게 ‘빨리 끝내 달라’ ‘우리 부인이 좀 아프니까 배려해 달라’ 이런 전화 할 수 있을까요?

○국무총리 이낙연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현장에 참여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김성찬 의원 그러니까, 아니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은 장관이기 때문에 현장 가지 못 하고 우연하게 부인이 바뀌준 전화를 받은 것이지요. 형사소송법 123조에 따르면 가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적에는……

○김성찬 의원 아니, 참여하는 거야 참여할 수 있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거주자 책임자를 참여시키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요 일반인이었다면 가장이 그 현장에 가 있어야지요.

○김성찬 의원 가장으로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장관입니다’라고 전화하시면 안 되잖아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 점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공교롭게도 그 가장이 장관이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찬 의원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해서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살펴보니 11시간 동안 걸린 게 처음에 왔을 때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려라’, 물품 압수할 때 ‘영장 발부해서 가져와라’ 하는 시간이 전부 다 걸려서 11시간 되었는데 11시간 동안 집안을 샅샅이 했다고 이렇게 일부 비판하는 부분은 사실관계와 다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은 공권력의 집행이면서 동시에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이고요, 최소화되

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영장의 추가 발부가 있었다거나 또 여성 두 분만 계시는 곳에 많은 남자들이 가서 11시간 동안 있으면서 식사를 배달받아 먹었다든가 하는 것은 과잉의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찬 의원** 11시간 동안에 변호사가 없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은 국민들께서 과도했다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김성찬 의원** 아니,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11시간 동안 여성 두 분만 있다고 하셨는데, 변호사가 없었나요?

○**국무총리 이낙연** 변호사가 나중에 왔었지요.

○**김성찬 의원** 나중에 아니라 압수수색할 때에 변호사가 와서 시작했잖아요.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님, 기본적으로 가장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

○**김성찬 의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변호사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변호사 입회하에 압수수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사실관계를 호도하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이낙연** 호도가 아니라요, 거주자로서는 여성들만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김성찬 의원** 이렇게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총리께서 지적하시고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용히 수사하라’ 이런 것부터 없어야 됩니다. 검찰개혁 이전에 이러한 관행이 없어야 검찰이 정말로 눈치 보지 않고 국민을 위한 검찰 될 것 아닙니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검찰도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찬 의원** 수고했습니다.

통일부장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시고 청와대에서 한 말씀 들으신 것 아닙니까, 진짜?」 하는 의원 있음)

통일부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지요? 장관께서는 어떤 통일 정책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통일부는 국내적으로는 통일 교육도 있고 법·제도도 있고 아무래도 남북 관계를 해결해야 될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김성찬 의원** 아니,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임무 수행하느냐 물었잖아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찬 의원** 통일과 자유민주주의 가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여러 가지 가치들이 다 중요합니다.

○**김성찬 의원** 무슨 여러 가지 가치가 중요하니까?

헌법 4조 아세요? 헌법 4조 이야기해 보세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헌법 4조는 평화통일에 관련된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찬 의원** 내가 읽어 드릴게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서 통일을 추구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답을 못 해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 정신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찬 의원** 그것을 답을 못 해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통일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김성찬 의원** 됐습니다.

○**통일부장관 김연철** 계승하고 있습니다.

○**김성찬 의원** ‘이산가족에게 서로 만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남쪽 정부든 북쪽 정부든 함께 잘못하였다’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절박성을 말씀하시면서 정부 입장에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찬 의원** 아니, ‘남쪽 정부가 잘못했다’ 이런 표현도 문제이고……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총 몇 번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지금까지 많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김성찬 의원** 몇 번이요, 몇 번?

○**통일부장관 김연철**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김성찬 의원** 아니, 그것도 확인 못 합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2018년 8월 달에, 최근에 있었습니다.

○**김성찬 의원** 스물여덟 번 중에 몇 번이 지연되고 몇 번 중단됐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관계의 역사에……

○**김성찬 의원** 몇 번 중단되고 몇 번 지연됐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반영하고 있는데요. 남북 관계가 잘 풀릴 때는……

○**김성찬 의원** 어허……

○**통일부장관 김연철** 이산가족 상봉이 잘 됐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잘 안 됐습니다.

○**김성찬 의원** 총 세 번이 중단되고 다섯 번이 지연됐어요, 전부 다 북한 측의 사정 때문에. 북한 측이 내부 사정이다, 9·11 사태다, 대포동 발사로 대북지원 유보 반발…… 북한 때문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정확한 현실을 그대로 지적하고 평가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정말로 신뢰 있는, 국민이 지지하는 그런 통일 정책과 남북관계가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왜곡되게, 편협된 이런 분석을 하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의원님, 물론 어렵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그것을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김성찬 의원** 어렵고 힘든 것 압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솔직하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평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김연철** 의원님 말씀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도 추석 날 임진각에 가서 이산가족 어르신들을 뵈었을 때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의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차관님, 지금 실질적 비핵화가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요, 남북 간에?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생각만큼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찬 의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지금 북·미 간에 실무협상이 우선 개최되고 있지 못하게 된 것이……

○**김성찬 의원** 아니, 그것 근본 이유가?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취해야 될 조치와 또 북한이 생각하는 거기에 맞는 상응조치 간에도 아직 일치를 보고 있지 못합니다.

○**김성찬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비핵화의 개념과 정의부터 서로가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이게 진도가 안 나가고 이렇게 어긋나는 겁니다.

북한은 영변의 시설만 비핵화하면 이것이 비핵화다라고 하고 한국 정부도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그것이 그것이다라는 인식하에 해 왔기 때문에 미국과의 대화가 이렇게 어긋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말씀드리자면 영변 시설의……

○**김성찬 의원** 그러면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폐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김성찬 의원** 중요하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그렇지만 그것이 된다고 해서 완전한 비핵화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찬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제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또 우리 한국 국민이 생각하는 비핵화 또 지금 정부가 북한과 대화하면서 말해왔던 비핵화—이 정도면 됐다 하는 부분—또 미국이 지금 생각하는 비핵화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할 때마다 이것이 어긋나고 어긋장 나고 이렇게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한미 간에는 적어도 완전한 비핵화라든지 그것을 도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사이의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찬 의원** 그래서 그러한 게 언제, 어디서 나타나느냐?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가 비핵화의 입구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뜻이 됩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영변의 비핵화가 중요한 한 단계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찬 의원** 출구는 어디입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출구는 완전한 비핵화가 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성찬 의원** 그렇지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정의가 안 내려졌잖아요. 무턱대고 입구에 들어가서 나중에 출구 못 찾아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그런 합의를 전제로 해서, 그다음에 다양한 방법론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김성찬 의원** 그렇지요. 일단 영변 핵시설 폐기부터 시작해서 체제 해제나 체제 보장 이 카드가 다 아예 나가서는 안 된다, 물론 시작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입구 들어가서 나중에 잘 안 되면, 출구가 안 나오면 그때 돌아 나올 겁니까? 그것 스톱할 겁니까?

왜냐?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영변의 핵시설 비핵화만 하고 그걸 통해서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되고 체제가 보장된다면金正은이가 무엇 때문에 다음 비핵화 단계를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지. 거기서 스톱하지. 안 그래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상태에 대한 합의와 그다음에 그걸 도달하기 위한 로드맵이라든지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고요.

○**김성찬 의원** 그런데 그 개념부터 확실히 해서 단계를 밟아 가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 엔드 스테이트(end state)와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정확하게 의사를 교환해서 합의하여 그 터널로 들어가든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그러한 한미 간의 목표에 대해서 북한이 접근해 올 수 있도록 실무협상에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찬 의원** 지금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체제 보장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북한이 안전보장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성찬 의원** 체제 보장이 주한미군 축소 또는 철수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한미의 동맹 사안입니다.

○**김성찬 의원** 축소, 감축 없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따라서 한미 간에 그것 협의할 문제입니다.

○**김성찬 의원** 그래서 깜짝쇼나 이벤트로 국민을 현혹시키려 하지 말고 정말로 실질적 비핵화가 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자신감 있게 이 문제를 우리 정부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 예,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찬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세요.

수고 많습니다.

9·19 합의서 평가하면서 성공적이다 자축을 하였던 언론 보도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자축은 아니고 9·19 군사합의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많이 강조하신 북한의 그런 완전한 비핵화를 일구어 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군사적인 긴장도를 남북 간에 낮춰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고, 지금 현재 초기에 조금 진행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체돼 있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찬 의원** 그래서 합의서 이후에 현재까지 접경지역에서 충돌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셨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지금 현재 그 접경지역에서 아직……

○**김성찬 의원** 아니, 9·19 합의서 없을 때는 충돌이 항상 있었습니까? 누가 볼 때 9·19 합의서 없을 때는 매일 충돌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오해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정경두** 꼭 충돌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의원님께서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서해상에서 그런 북한의 기습 도발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 많은 장병들의 희생이 있었고 또 예를 들면 무인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와 가지고 정찰활동도 하고 가고 했던 여러 가지 일련의 사안들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현재는 그런 것들은 없는 상태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

○**김성찬 의원** 그러니까 1년 그것 가지고 잘 됐다 자축 평가하는 것은 틀렸다……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슬라이드.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래서 자축 평가가 아니고……

○**김성찬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과거에도 한번 보세요. 2015년 목함지뢰 도발 후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한 후에 16년 2월부터 17년 6월까지 488일 동안 또 468일 동안 아무 충돌 없었어요. 왜 9·19 합의서가 전가의 보도인 것 같이 이렇게 평가를 하느냐, 너무 왜곡되고

한쪽만 보는 거다. 동의합니까? 저 사실은 동의합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충돌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무인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영공으로 들어와 가지고 정찰활동들을 하고 간 이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성찬 의원 아니, 무인기 그것 뻔 거예요. 무인기가 17년 6월 9일까지 나왔기 때문에 연장이 아니고 중간중간 이렇게 이야기, 설명하잖아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다……

○김성찬 의원 합의서 이후에 1건의 위반도 없었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현재까지는 위반 사안은 없다 이렇게……

○김성찬 의원 그러면 10차례 미사일·방사포 발사가 우리 위협이 아니고 도발이 아니라고 애매하게 말씀하시던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애매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도 늘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군의 사명이요 임무이기 때문에 한 발 쏘고 안 쏘고 이런 걸 떠나 가지고 항상 대비를 잘 하고 있고 그런 데 대해서 미래의 준비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찬 의원 과거에 4개월 동안 총 10회 이렇게 발사한 적이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없었습니다.

○김성찬 의원 없었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최근에 가장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김성찬 의원 그리고 장관님, 어느 주권국가나 무기 시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김성찬 의원 어느 주권국가나 무기를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국방부장관 정경두 제가 그런 표현 한 적이 없습니다.

○김성찬 의원 그래요?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이것을 발사할 때 무기체계 시험평가로 발사한 게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파철로 만들겠다. 무력시위 발사다. 단호히 제압·분쇄하겠다. 예고된

무력시위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게 단순히 무기체계 개발입니까?

장관님, 무력시위가 뭐예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북한 입장에서 개발 그다음에 무력시위 그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발사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저희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김성찬 의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9·19 합의서 위반 아니더라고 보는 나이브한 생각에 대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정경두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저는 그것은 말꼬리 잡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찬 의원 그래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이게……

○김성찬 의원 장관님, 무력시위가 무슨 말입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자기네들이 보여 주는 행동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담아서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그런 게 있다……

○김성찬 의원 그래요. 내가 읽어 드릴게요. ‘군사력을 과시하거나 위협함으로써 심리적 압박감으로 상대를 교란시키는 작전’이랍니다.

이런 작전을 하는 게 어떻게 도발이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항상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찬 의원 만반의 준비야 당연히 하는 것이고, 9·19 합의를 위반하더라도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정경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성찬 의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9·19 합의서가 정말로 우리 안보에 도움 안 되는 거다……

서해·동해 해안포 포문 개방한 것은 뭘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초기에 개방돼 있는 곳이란 군데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강력하게 그걸 항의를 했었고 북측에서 ‘거기에는 해안포가 없다’ 하고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는 전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찬 의원 그래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간에 저희가 그런 데 대해서 다 체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찬 의원** 장관님이 지금 여기 답변 허위로 하시는데, 개머리 해안포 개방 때에도 계속 하였다고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하였고 서해에도 13개 해안포, 동해에도 3개 해안포의 포문을 개방하였다고 국방부에서 이야기하였는데도 합의가 위반 아니라고 지금 우깁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 해안포 포문이 개방되거나 그런 것들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찬 의원** ‘포문이 왜 개방되었나?’ 하니까 ‘환기를 위해 수시로 열고 닫는 줄 안다’고 국방부 대변인이……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그런……

○**김성찬 의원**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었지만……

○**김성찬 의원** 아니, 장관님, 이게 합의서 위반이잖아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게 예를 들어서 군사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행위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군사적으로 어떤 도발이나 위협 행위를 한 그런 것들은 없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찬 의원** 합의서 위반한 것 물은 겁니다, 지금. 합의서 위반했느냐.

평가는 합의서 하나도 위반 안 했다고 이야기하고 대통령께서도 유엔 연설 가서 합의서 위반 안 했다고 하는데 합의서 위반한 것을 장관님께서 대통령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말이지요.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평시에는 우리 한국 합참이 행사를 하고 있고……

○**김성찬 의원** 지휘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휘권. 전·평시. 전시에 지휘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전시는 지금 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찬 의원** 무슨 전시에 연합사령관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작전지휘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성찬 의원** 지휘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지휘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것은 군 통수권자……

○**김성찬 의원** 당연하지요. 한국군 지휘권은 전·평시에 전부 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시에 작전통제권만 한미연합사령관한테 줬잖아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김성찬 의원** 그게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일단 의사결정은 한미 통수기구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찬 의원** 그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김성찬 의원** 그렇다면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군 일 뿐이지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지 않은데 무슨 전환이고 환수입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일단 현재 사령관 자체를 미 측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전작권 전환을 하면서 우리가 사령관을 하겠다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성찬 의원** 그게 전작권 전환이고 환수가 아니고요,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체제를 조정하거나 개편하는 겁니다. 그 사령관을 한국군 사령관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요 미국이 우리 전시에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국민들한테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해서 안보 태세를 허약하게 만드는 이런 행위를 하나 이겁니다.

○**국방부장관 정경두** 안보 태세를 허약하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찬 의원** 장관님,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김성찬 의원** 전작권 전환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미래연합사령부가 지금 시스템보다 더 강화돼서 창설이 됩니다.

○**김성찬 의원** 어떻게 강화가 됩니까,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지금도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미래연합사령부는 참모 기능을 더 보완시키고 그 미래연합사령부 예하에 각 군 구성군 사령부를 지금보다 훨씬 더 탄탄하게, 굳건하게 시스템적으로, 조직적으로 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찬 의원** 지금 한미연합사령부가 한반도 평화와 북한 도발 저지하는 데 무슨 문제 있었습

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지금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김성찬 의원 문제가 없는데 뭐 하려고 손을 대 가지고 이렇게……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2006년부터 진행되어 온 사안 아닙니까.

○김성찬 의원 2006년부터 해도 시기적으로 지금 북한과 핵 미사일 위협이 있는 때 이때는 아닙니다, 하더라도 다음에 하라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그래서 지금은 ‘조건에 기초한’이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찬 의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대화는 필요합니다. 대화나 문서로 평화가 온다면 더없이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서나 말로써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역사가 말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화를 하더라도 합의를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국민을 하나 된 마음으로 뭉치도록 해야 합니다. 강력한 안보 태세로 어떠한 도발도 격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방국과의 동맹을 더 튼튼하게 발전시켜 위협을 같이 막아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누구의 것도 아니고 어느 정권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오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입니다. 어느 정당 어느 정권이 마음대로 국가 체제를 바꾸려 해서도 나라의 미래를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운 문제일수록 조금해하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국민적 차원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승용 김성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화성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권철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승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문화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화성시병 국회의원 권철승입니다.

우리는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국제경제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경제도발이 있습니다. 반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은 때로는 희망을, 때로는 실망을 주는 변화무쌍한 국면입니다. 무엇보다 단합된 국민의 힘과 정부의 중심 있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조국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산적인 정기국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일본 전문가이시고 지일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나름대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30년 가까이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마는 결과가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회한이 서립니다.

○권철승 의원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우리에게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본과의 경제전쟁 그리고 역사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한일기본조약에 대해서 근본 문제를 몇 가지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이라든가 지배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반성과 사죄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권철승 의원 한국의 역대 정부는 1910년 병합이 협박과 기만에 의한 불법 강제점령으로 인식하고 경우에 따라 식민지배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따라서 역사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작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올해 7월 달에 마침내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부실을 핑계로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경제 도발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보다 전략물자 무역관리 평가가,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한국이 17위이고 일본은 36위에 불과합니다.

일본발 가짜뉴스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일본이 뭘 모르고 그랬는지 알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전략물자를 더 많이 유출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있습니다.

○권철승 의원 예, 그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꾸준히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도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일본 스스로가 말이 바뀔다라는 결정적일 때마다 아베 총리나 장관들이 ‘문제는 강제징용 판결이다’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철승 의원 즉 이 정치적 이유를 경제적 문제로 옮겼으며, 그동안 정경분리의 관행을 아베 정권이 깬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일본 신문들도 그렇게들 비판하고 있습니다.

○권철승 의원 그뿐만이, 양국 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국제분업과 자유무역의 근본적인 체제를 깨뜨린 그런 행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무역분쟁의 책임도 일본에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일본이 7월 1일 발표하고 7월 4일부터 시행했습니다라는 세 가지 핵심적인 부품·소재에 대해서 일본이 엄격한 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한일 간에는 오히려 한일 양국의 경제나 또는 사회, 심지어 민간교류까지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얹혀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본의 조치가 한국에도 물론 많은 불편을 주고 있지만 일본에게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권철승 의원 요즘 조국 장관과 관련된 근거 없는 의혹들 때문에 뉴스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라는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국내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렸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더 이상 한국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시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보수를 자칭하는 어떤 유튜버는 ‘과연 일본이 몇 번이나 더 사죄를 해야 상황이 좋아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부대 대표라는 분은 ‘아베께서 사과했다. 이제는 일본을 용서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은 남은 여생 편히 지내시라’, 그리고 직전 대통령의 동생 되시는 분은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등등의 수많은 일본을 대변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일본이 사과를 여러 차례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라는 사과하고 며칠 안되면 또 반대의 얘기를 하고, 심지어 최고지도자마저도 ‘눈곱만치도 뭐 할 생각이 없다’는 대단히 자극적인 말씀을 반복하시기 때문에 사과를 해 놓고도 전혀 사과했다는 느낌을 못 주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권철승 의원 그렇습니다. 아베 정권 이후만 보더라도 위안부의 강제성을, 일본의 관여를 조금이나마 인정했던 고노 담화에 대해서 소위 검증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정에 가까운 훼손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헌을 통해서 전쟁 가능국을 지금 획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94년 무라야마 담화에 부전의 결의하에 세계 평화와 창조에 기여하겠다고 대외적으로 공포한 바가 있는 일본입니다. 그것을 정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공물을 바치고 다케시마의 날에 정부 인사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독도 관련한 역사 왜곡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2014년에 일본 고유 영토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교과서에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의 시행 시점을 2022년에서 올해로 앞당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 있었던 몇 차례의 사과성 발언들이 진정성이 전혀 없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소

관리에 일본군이 관여했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들어가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 그 유명 대학의 교수님들께서 일본 정부 대변인보다 더 일본을 대변하려고 하는 참담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철승 의원 참담합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다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하려면 진정한 사과였으면 좋겠고요, 그런 가짜 사과는 더 이상 저는 개인적으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권철승 의원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불매운동, 이것 소용없다는 이야기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다 듣고 계셨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 문제는 민간의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 있는 사람이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철승 의원 그냥 여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매운동을 해 봐야 일본이 망하지 않는다’, 또 국민들의 자발적 불매운동을 ‘비이성적인 열기다. 저급한 퇴행적 운동이다. 시대착오적이다. 구한말도 아닌데 웬 불매운동이나’ 이렇게 비하하는 일부 정치인·학자들이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마치 일본 정부나 일본의 우파 언론들이 한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느낌이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이삼십 년 전만 해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 한국 국민의 여론이 하나가 돼서 일본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했습니다만 요즘은 거꾸로 일본의 언론과 일본 국민들이 이삼십 년 전의 한국처럼 혐한 분위기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만 국제적으로 공인된 또는 역사적으로 판정이 끝난 문제는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권철승 의원 1907년에 우리 선조들은 뚝고루, 비녀들을 모아서 국채보상운동을 했습니다. 또 3·1운동 당시에 총칼에 맨손으로 맞섰습니다. 일본을 힘으로 이기겠다는 생각이 아니었을 겁니다. 불매운동도 일본을 망하게 할 생각이나 이것 해서 일본이 망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

이 소용없는 것이라는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우리의 위대한 정신 유산들을 모욕하는 행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민간 차원의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권철승 의원 그러나 국채보상운동의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위대한 정신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그뿐이 아닙니다.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각종 망언들이 릴레이처럼 일어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고 반일 감정만 자극한다는 그러한 선동적 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정부 비판 기사를 분석한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유력 일간지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 정부는 반일 감정만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주장만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 플러스 1 또는 피해자들이 동의하고 양국 국민들이 수용하는 안을 찾아 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지금의 상황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외교적 해결 입장을 피력을 하셨습니다. 과연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금년 봄 이후에,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만, 고위 인사를 특사 형태로 일본에 비밀리에 파견한 것만 해도 세 차례 이상입니다. 심지어는 8월 15일 대통령께서 대단히 절제된 광복절 경축사를 낭독하고 계시던 그 시간에 특사가 도쿄에서 일본의 상대측을 만나고 우리의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이미 우리의 광복절 경축사를 24시간 이전에 일본 측에 사전에 알려드리고 또 우리의 새로운 제안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마는, 경축사 내용을 미리 알려 줘서 고맙다든가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든가 하는 그런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외교 협의에 임하는 자세로서는 몹시 유감스러운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본 측은 강제징용 판결 그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 간, 또 수출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부 간 협의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진전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고지도자들이, 특히 일본의 아베 총리께서 실무 협의가 제대로 진척되도록 격려해 주시면 효과가 나타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 보여 주신 한일 정부 간 약속을 한국 정부가 깨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보도인데요, 좀 설명을 잠깐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철승 의원 예,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한일기본협정이 체결된 것이 1965년 6월 22일이었습니다. 그해 1965년 12월 17일에 일본 국회가 급히 법률 제144호를 채택합니다. 그 법률 제144호는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쇼와 40년, 즉 1965년 6월 22일을 기해 소멸된 것으로 한다’.

말하자면 한국인의 개인적 개인청구권은 그해 65년 6월 22일에 소멸된 것으로 한다는 것을 6개월 뒤에 법으로 만듭니다. 그 말의 뜻은 65년 6월 22일 한일기본협정에 개인청구권 소멸이 분명하게 박혀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일본이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철승 의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래서 그 6개월 뒤에 소멸로 간주한다는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국의 강제징용 노동자 또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이 법률 제144호를 근거해서 그 소송을 기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 국내법일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뒤로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순지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국회에 가서 ‘한국인의 개인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소멸된 것은 양국 정부의 외교보호권이 소멸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권철승 의원 그렇습니다. 분명히 기록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니까 아베 총리께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다면 오히려 일본이 오랫동안 지속된 일본 정부 스스로의 입장을 지금 위반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철승 의원 그렇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외교적 노력과 합리적 노력을 한 것은 한국 정부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각종 친일 발언이 난무했습니다. 또 일간지가 낸 한국판과 일본판의 비교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한국판에는 일제강점기라고 되어 있고 일본판에는 일본통치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통치시대라고 하는 표현 혹시 한국에서 과거에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국내에서는 처음 봅니다.

○권철승 의원 이것은 식민통치를 합법화하는 일본식 표현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흔히들 일제시대라는 말은 우리가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제강점기로 지금 수정이 되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일본통치시대라는 용어를 국내에서 들어본 것은 처음입니다.

○권철승 의원 이것은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근본적 해석 차이로 본다면 일본 편을 드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일본의 험한 분위기에 영향을 아주 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권철승 의원 그렇습니다. 최근에 토착왜구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어떤 것입니까?

○권철승 의원 토착왜구라고 하는 말이……

○국무총리 이낙연 예.

○권철승 의원 그런 것 아십니까?

저는 이런 비판을 받아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총리께서 뭐 견해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우리 사회가 좀 더 분명한 역사의식을 되찾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철승 의원 아까 잠깐 총리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직전까지 자유한국당 당원이시기도 했던 서울시내 모 대학의 교수께서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고 살기가 어려워서 했다고 하는 일본의 극우세력도 감히 하기가 어려운 이야기를, 그런 망언을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또 그뿐만 아니라 낙성대경제연구소의 모 박사께서는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 회의 정기회의에 가서 조선인 노무자들의 임금도 높았고 전쟁기간

자유롭고 편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권철승 의원 이거 일본 극우파 인사들도 쉽게 하기 힘든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이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같은 엇비슷한 시대를 살아가는 언필칭 지식인으로서 저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또 비슷한 처지입니다만 그런 사실 자체가 몹시 부끄럽습니다.

○권철승 의원 조선에 조력자가 있다고 하는 일본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최근 일본과 한국 간의 무역전쟁 기간에 많이 확인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도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금 문제됐던 그런 것들은 일본 정부도 일본군의 관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세계의 인권기관들이 이미 역사적 또는 사실적 판단을 끝낸 문제입니다. 이제 와서 그것과 동떨어진 모멸적 이야기를 지식인의 입으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권철승 의원 최근 배상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 이외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밝히지 못한 일본이 저지른 강제동원, 학살 이런 반인도적 범죄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2005년에 민관공동위원회 발표자료를 보면 해남도 학살사건과 같은 일본군이 관여한 반인도적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을 한 후 정부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후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위원회에 비해서 일제 강제동원과 관련된 피해와 진상 규명을 하는 예산이 턱없이 줄었습니다. 2019년부터 예산이 조금씩 생기고는 있지만 그래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총리께서 이 부족한 현실을 좀 매꿔 주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산을 조금 늘렸고요 내년 예산에는 아마도 27억쯤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인원도 10명을 더 늘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해남도 천인강의 경우는 많은 사람이 북한 출신이어서 연고자를 찾는 문제가 지난하게 되어 있고요, 또 현지 지방자치단체나 그와 관련 있는 일본이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유해봉환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속도를 내도록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갖도록 그것을 함께 협의하고 있습니다.

○권철승 의원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요.

일본의 과거사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진상 규명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안부 문제가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권철승 의원 10월 14일 날 일본 자위대 관함식이 예정되어 있는데 중국은 초청했고 한국은 초청 안 했다고 합니다. 이것 사실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권철승 의원 혹시 배경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작금의 양국관계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철승 의원 그러면 10월 22일 날 일왕 즉위식 때 초청이 있으면 정부인사가 참석하실 것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누가 갈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권철승 의원 참석 여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안보문제로 지금 수출규제를 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를 했고 이는 안보협력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군사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심심치 않게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직 11월까지 유효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 주장 자체가 모순이고 굴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GSOMIA 종료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지목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목받은 처지에 ‘군사정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국익에도 맞지 않고요. 그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측이 그런 부당한 조치를 철회한다면 저희도 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철승 의원 일본의 태도 변화가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말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추진하던 지원 사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중단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중단된 것은 사실입니다.

○권철승 의원 중단된 것 자체는 사실인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권철승 의원 그런데 2017년에 미국이 유네스코를 탈퇴한 이후에 2017년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낸 나라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2019년은 중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로비 압박에 대한 의혹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요, 위안부 관련된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노력을 재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저희들은 계속할 것이고요 어두운 역사는 숨기거나 왜곡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청산 노력이 있어야만 없어지는 것이라는 걸 일본의 우인들이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권철승 의원 시간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관련입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지금 환경상, 원자력규제위원회 등등이 희석해서 방류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완전히 공식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거인멸 차원에서도 이것을 일본이 선택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동해바다에는 남북이 따로 없습니다. 바다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 공조는 물론이고 국제 공조를 통해서 이 방사능에 대한 대책은 물론이고 올림픽 보이콧까지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올림픽 보이콧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방사능 문제는 양국 관계나 경제적인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걸 뛰어넘는 우리 국민의 건강이라는 기본적인 요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의 인류가 함께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KOC와 IOC를 통

해서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동 대처를 요구하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외교부가 일본 외무성을 통해서 정보의 공개와 일본 입장의 설명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해양 방류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본의 공식 입장인 것 같고 일본에 새로 입각하신 신임 환경상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임자보다는 좀 더 엄격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권철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권철승 의원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승용 권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산회)

#### ○출석 의원(265인)

강 병 원	강 석 진	강 석 호	강 창 일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권 미 혁	권 성 동	권 은 희	권 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광 수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옥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선 동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성 원	김 성 찬	金 成 泰	김 성 환
김 세 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춘
김 영 호	김 용 태	김 재 경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정 훈	김 종 석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도 종 환	맹 성 규
문 진 국	문 희 상	민 병 두	민 홍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지 원

## 강 병 원      강 훈 식      고 용 진      곽 대 훈

권칠승	김경협	김도읍	김민기
김상희	김성찬	김승희	김영진
김영호	나경원	민홍철	박덕흠
박정	박지원	박찬대	서영교
손혜원	신동근	심기준	안상수
오신환	우상호	유동수	윤영석
윤일규	윤종필	윤후덕	이원욱
이은재	이종걸	이진복	이철희
이학영	이해찬	이헌승	전혜숙



정 양 석    정 인 화    함 진 규    홍 영 표

## ○청가 의원(18인)

강 효 상    광 상 도    김 동 철    김 부 검  
 김 정 호    김 중 민    김 중 회    김 현 권  
 민 경 욱    박 영 선    송 갑 석    이 재 정  
 이 정 미    이 철 규    전 재 수    정 동 영  
 조 원 진    홍 익 표

## ○국회 참석자

입 법 차 장                    한 공 식  
 의 사 국 장                    권 영 진

##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 무 총 리                    이 낙 연  
 통 일 부 장 관                김 연 철  
 국 방 부 장 관                정 경 두

## ○출석 정부위원

외 교 부 제 1 차 관                조 세 영

## 【보고사항】

## ○소위원장 선임

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운영	청원심사	이동섭	바른미래당	2019. 9. 26.

##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운영	이동섭	바른미래당	2019. 9. 26.

##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교 육	맹성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2019. 9. 26.
보건복지	박경미	맹성규		
외교통일	이수혁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2019. 9. 27.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이인영	이수혁		

## ○특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예산결산 특 별	김삼화	이태규	바른미래당	2019. 9. 26.

## ○의안 제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9. 9. 26. 민경욱·정유섭·추경호·김석기·김명연·정태욱·박덕흠·서청원·김선동·김학용 의원 발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사기진작**

## 촉구 결의안

(2019. 9. 26. 이상민·이용득·기동민·여기구·강창일·소병훈·박정·위성곤·이종걸·노웅래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9. 9. 26. 이찬열·전혜숙·이동섭·황주홍·박찬대·전재수·유동수·이용득·신용현·위성곤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2019. 9. 26. 박맹우·추경호·이채익·김영우·김성태·박완수·안상수·윤재옥·이진복·홍문표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9. 9. 26. 전재수·김철민·정재호·윤준호·박재호·최인호·이종걸·정세균·이수혁·신동근 의원 발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9. 9. 26. 민경욱·정유섭·추경호·김석기·김명연·정태욱·박덕흠·서청원·김선동·김학용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9. 9. 26. 안호영·김현권·서형수·여기구·강훈식·윤관석·제윤경·이규희·이후삼·이용득·최인호·박재호 의원 발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9. 9. 26. 강창일·홍의락·이용호·이종걸·송갑석·이상현·김민기·홍익표·김해영·윤일규 의원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무성 의원 대표발의)

(2019. 9. 26. 김무성·황영철·주호영·강석호·김명연·정병국·이채익·송언석·추경호·원유철·김재경·송희경·김세연·김학용·김수민·정진석·정양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9. 9. 26. 오제세·도종환·황주홍·원유철·임재훈·김두관·박덕흠·이명수·강길부·홍문표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2019. 9. 26. 정동영 · 유성엽 · 황주홍 · 장정숙 · 문진국 · 박주현 · 김종희 · 임재훈 · 김동철 · 인재근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 발의)

(2019. 9. 26. 채이배 · 임재훈 · 김삼화 · 신용현 · 김수민 · 오신환 · 이동섭 · 김종민 · 제윤경 · 김관영 · 이용호 · 김동철 · 김종훈 의원 발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 발의)

(2019. 9. 26. 김철민 · 김영진 · 송옥주 · 박정 · 이용득 · 정재호 · 윤후덕 · 김민기 · 이학영 · 소병훈 · 임종성 · 이상헌 의원 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 발의)

(2019. 9. 26. 신경민 · 기동민 · 박홍근 · 김성수 · 전재수 · 윤종필 · 김광수 · 임재훈 · 박찬대 · 노웅래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 발의)

(2019. 9. 26. 신보라 · 이철규 · 추경호 · 김학용 · 홍문표 · 정운천 · 김석기 · 송언석 · 박명재 · 김선동 · 경대수 · 윤종필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 발의)

(2019. 9. 26. 채이배 · 장정숙 · 이찬열 · 김종민 · 임재훈 · 김관영 · 김동철 · 강병원 · 김종훈 · 추혜선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 발의)

(2019. 9. 26. 김철민 · 김영진 · 송옥주 · 박정 · 이용득 · 정재호 · 윤후덕 · 김민기 · 이학영 · 백혜련 · 소병훈 · 임종성 · 이상헌 의원 발의)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 발의)

(2019. 9. 26. 김철민 · 김영진 · 송옥주 · 박정 · 이용득 · 정재호 · 윤후덕 · 김민기 · 이학영 · 소병훈 · 임종성 · 이상헌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 발의)

(2019. 9. 26. 김영진 · 김병기 · 안호영 · 김경협 · 이원욱 · 인재근 · 조웅천 · 윤관석 · 이후삼 · 강훈식 · 김영춘 의원 발의)

이상 19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 헌법불합치판결의 효력에 관한 질문서

(2019. 9. 26. 김정우 의원 제출)

○서면질문서 제출